2013년 업무계획

국민행복,
희망의 새시대

# "국민행복을 향한 맞춤복지"

## < 주요정책 추진방향 >

2013. 3. 21

보건복지부

# 목 차

Ⅰ. 정책 여건 및 추진방향 ····· 1

Ⅱ. 새 정부 국정과제 실천계획 ····· 12

〈아동〉 걱정없이 아이를 낳고 키우는 사회환경 조성 ····· 13

〈청장년〉 일자리 창출을 통한 창조경제 선도 ····· 17

〈노인〉 행복한 노후를 위한 국가적 지원체계 구축 ····· 23

〈취약계층〉 대상자별 맞춤형 복지를 통한 사각지대 해소 ····· 27

〈보건의료〉 건강한 삶을 보장하는 보건의료체계 개혁 ····· 34

Ⅲ. 보건복지정책 3.0
(부처간 칸막이 제거 및 일하는 방식 개선) ····· 39

〈별 첨〉 국정과제 세부 추진일정 ····· 46

# Ⅰ. 정책 여건 및 추진방향

1. 정책 여건

2. 새 정부 복지정책 방향

# 1 정책 여건

## 1 거시환경 분석

□ 현재 우리나라는 ① **저출산·고령화 심화**, ② **저성장 및 지식기반 사회化**, ③ **사회통합 약화**의 세 가지 주요 도전에 직면

○ 각 요인들은 **성장잠재력 약화**를 초래할 뿐만 아니라, **심각한 사회 갈등의 위험**도 내포하여 선진국 도약의 걸림돌이 될 우려

○ 그러나, 직면한 도전요인들을 잘 분석하여 **위기를 피하면서 기회를 살린다면 향후 우리 사회의 안정적인 성장이 가능**

<보건복지정책 분야 위기와 기회>

| 도전요인 | 위기 | 기회 |
|---|---|---|
| **저출산 고령화** | ▪ 생산가능인구 감소<br>▪ 복지재정지출 증가<br>▪ 세대간 갈등 증폭 | ▪ 향후 10년의 인구보너스 시기<br>▪ 의료, 여가, 실버 등 신산업 발전 |
| **경제·산업 구조 변화** | ▪ 성장잠재력 저하<br>▪ 일자리 창출 능력 저하<br>▪ 분배개선효과 약화 | ▪ 사회서비스 분야 일자리 창출 여력 충분<br>▪ HT 분야 우수인력 등 경쟁우위 조건<br>▪ IT 기술력, 인프라 등 |
| **사회통합 약화** | ▪ 중산층 감소<br>▪ 비정규직 문제 심화<br>▪ 가계부채 증가 | ▪ 삶의 질적 측면에 대한 관심 증가<br>▪ 공동체에 대한 긍정적 가치관 형성<br>▪ 공생발전 등 사회통합 강조 |

⇒ 향후 10년간 『사회 통합적 복지(Social Cohesion)』 구축에 주력하여 고령화 비용으로 인한 세대간 갈등에 대비하고, 사회서비스, 보건의료 등 신산업 분야 투자 확대를 통해 새로운 성장 활로 마련

1 **(인구구조 변화)** 우리나라는 **지난해 인구 5천만명을 돌파**('12.6.23)하여, 주요 선진국 중 7번째로 20-50 클럽(국민소득 2만불, 인구 5천만) 가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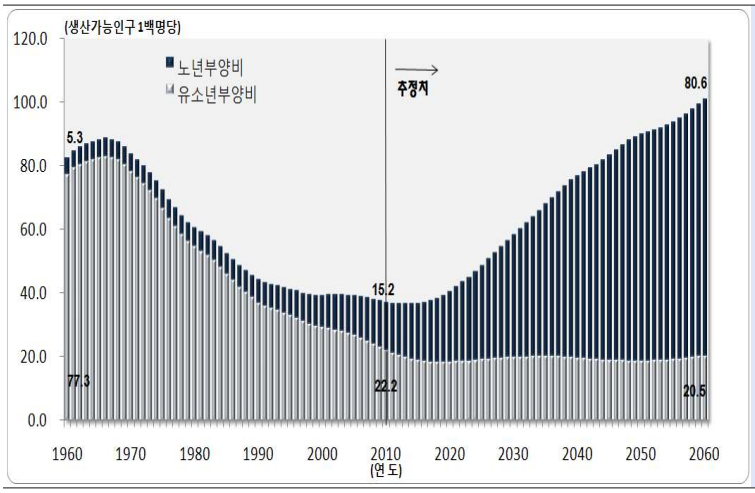
○ **(위기요인)** 그러나 현재와 같은 **초저출산 현상이 지속**될 경우 **'17년을 기점으로 생산가능인구가 감소**하고,

- '20년 이후부터는 고령화가 초래하는 **사회경제적 위기에 본격적으로 직면**할 전망

- 이러한 저출산 현상은 **청년실업의 장기화와 양극화, 계층 이동성에 대한 믿음상실,** 그로 인한 국민의 **낮은 행복수준**과 **미래에 대한 불안**의 산물

- 이에 따라, 세입은 감소(납세인구 감소)하나, **연금, 의료비 등 복지 지출은 증가**해 **사회적 부양부담 악화**와 **세대간 갈등 증폭 우려**

<노년부양비와 유소년부양비>




* 생산가능인구 1백명이 부양해야 하는 인구: ('10) 37.3명 → ('40) 77명

* 유소년인구와 고령인구 규모 : ('10) 100 : 68.4 → ('40) 100 : 288.6

(통계청, 장래인구추계 2010-2060)

○ **(기회요인) 생산가능인구가 적정수준 유지**되면서 사회적 부양부담이 크게 높지 않은 **'인구Bonus' 시대**가 향후 10년간 지속될 전망

- 이 기간을 최대한 활용, 젊은 세대의 조기 사회진출 지원,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율을 제고하여,

- **고령화의 충격이 현실화되지 않도록 인구구조에 대한 개선 작업을 서둘러 추진**할 필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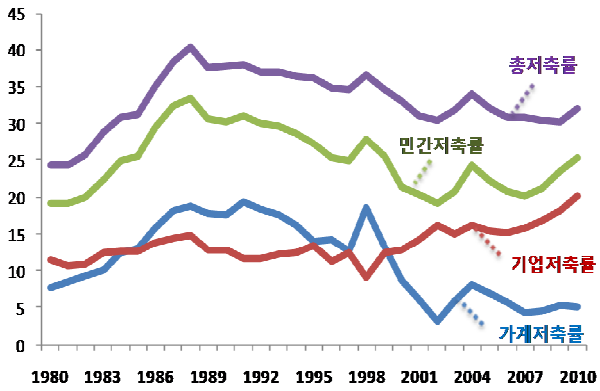
2 **(경제산업구조 변화)** 특별한 계기 없이는 향후 과거와 같은 **빠른 속도의 경제 성장은 기대하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

○ **(위기요인)** 연평균 경제성장률은 지난 4년간('08~'11년간) 3.1%, **'12년도 2.5%**로 **장기적으로는 더욱 하락**할 것으로 예측('12.9월, KDI)

* 우리나라의 경제성장률: 2010년대 4.1%, 2020년대 2.8%, 2030년대 1.7%로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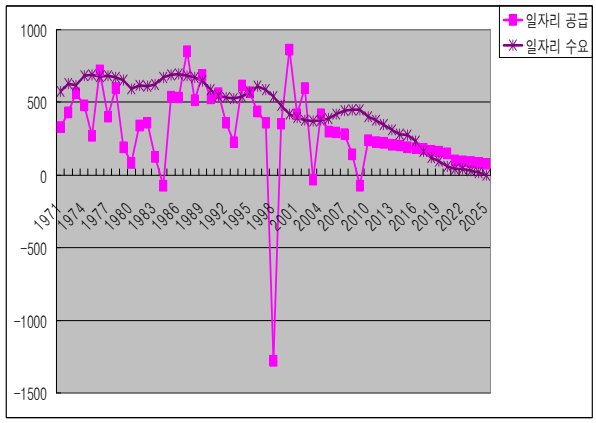
- 이와 함께, **성장의 일자리 창출 능력**과 그로 인한 **분배개선 효과** (trickle- down effect)는 **점차 약화**(Jobless Growth)

<부분별 저축률>




자료: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

<연도별 일자리 수요 및 공급>




○ **(기회요인)** 사회서비스, 보건의료 분야 등 **새로운 성장 동력 존재**

- 국민의 복지 수요 증가 등 **사회서비스 확충 필요성이 높아짐에 따라 사회서비스 분야의 일자리 창출 잠재력 충분**

* 지난 5년간 보건복지서비스업 취업자는 약 57만명 증가(전체 취업자 증가분의 50.5%)
* 전체 일자리 중 보건및사회복지업 비중('12): 한국 5.7%, 미국 12.8%, 일본11.2%
* 취업유발계수('10년, 단위: 명/10억) : 사회복지 : 41.2, 전산업: 12.9, 제조업: 9.3

- **의학·생명분야의 우수한 인적자원 및 기술력, IT 인프라** 등 HT산업 **경쟁우위 조건을 구비**, 글로벌 리더로 도약할 수 있는 잠재력 충분

* HT 분야 (의약, 의료기기, 의료서비스) 산업규모는 약 5조 달러 규모로 연평균 7.2%씩 상승, 우리나라의 산업규모는 507억 달러로 세계점유율은 1% 수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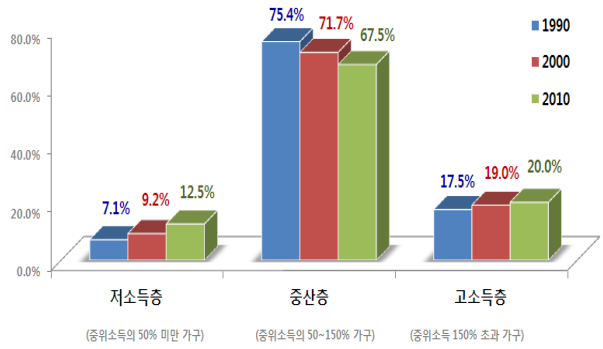
3 **(사회통합)** 지니계수, 소득 5분위 배율이 장기적으로 **점진적인 상승세**이며, **빈곤문제는 OECD 국가 중 가장 심각**

* 최저생계비 미만 소득의 절대빈곤 인구는 약 480만명(인구의 9.6%)으로 추정, 상대빈곤율(중위소득의 50% 미만)은 14.3% (OECD 평균 10.58%)

○ **(위기요인) 중산층 감소, 고용불안 심화, 가계부채 급증** 등으로 취약계층 증가 우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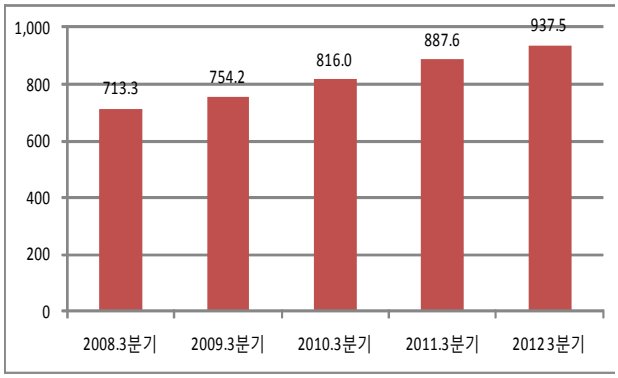
* 가계·자영업자 등 개인부채는 최초로 1,000조원 돌파(1,007조원, '11.1분기, 한국은행)

<소득계층별 비중 추이('03~'10)>




* 2인이상 비농가, 가처분 기준(통계청)

<가계부채 추이('01~'10)>




* 출처 :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

- 비정규직 비중이 크고,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임금격차 확대**

* 임금근로자의 34.9%가 비정규직, 임금 수준은 정규직의 57.1%('10) 수준 ('08년 55.5% → '09년 56.3% → '10년 57.1%)

- **계층간 아동·청소년의 교육 격차도 심각**해 빈곤의 대물림 우려

* 소득하위 20% 가구와 소득상위 20% 가구간 사교육비 지출차는 7.5배('09)
* 수능점수 차이 : 월소득 200만원이하 287.63점, 500만원 초과 317.38점

○ **(기회요인)** 사회통합 등 **삶의 질적 측면에 대한 국민의 관심 고조**

* 전문가의 72%, 일반국민의 60%가 재정투자의 최우선 순위로 '삶의 질 향상'을 선택 (보사연, '12.12)

- 나눔 활동 증가 등 **공동체에 대한 가치관이 긍정적으로 변화**

- 질적 성장에 대한 요구가 증가하면서 복지확충, 공생발전, 약자에 대한 포용적 제도 등 **사회통합 논의가 활발해질 전망**

## 2 2013년 정책여건 : 서민생활 위기 우려

□ (**대외여건**) **전 세계적 경기부진**이 예상보다 오래 지속되는 가운데 **유럽 재정위기 지속, 미국 재정긴축** 등의 **영향 우려**

* 국제기구들은 10월이후 세계성장률 전망을 대폭 하향조정
- '13년 세계성장률 전망(%) : (IMF, 7→10월)3.9→3.6 (OECD, 5→11월)4.2→3.4

○ **유로존**은 금융불안과 재정긴축 등으로 **실물경제 침체**가 지속되고, 취약국가의 **위기 재발 가능성** 상존

○ **일본**은 디플레이션 해소를 위한 경기부양 추진이 예상되나 **불확실성이 존재**하며, **중국**은 질적 성장을 추구하면서 **고성장을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

○ **미국**은 시퀘스터(sequester) 등 재정긴축조치에 돌입, **실물경제 위축 우려**

□ (**국내여건**) 경기회복 신호가 분명하지 않은 가운데, **가계·영세자영업자 부채 등이 가파르게 증가**하면서 **서민생활 여건 악화 우려**

* 가계부채 증가 추이 : '08.3분기 713.3조원 → '12.3분기 937.5조원

* '11년말 기준 가계부채 912조원, 자영업 대출은 103조원으로 총 1,000조원을 상회

○ **부채 총량**이 서민경제가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을 넘어**, '소비→투자→고용→소득→소비'로 순환하는 **경제성장 고리를 훼손**할 우려

* 가계의 처분가능소득 대비 금융부채 비율 : '11년 103.4% → '12년 109.6%

○ 글로벌 경제여건 악화 등 **갑작스런 경제위기 도래시** 많은 **서민층·저소득층**이 생계곤란 등 **어려움에 직면할 가능성**

⇨ **빈곤을 예방**하여 **중산층을 강화·복원하면서, 서민생활 악화**에 대비한 **선제적 복지투자** 필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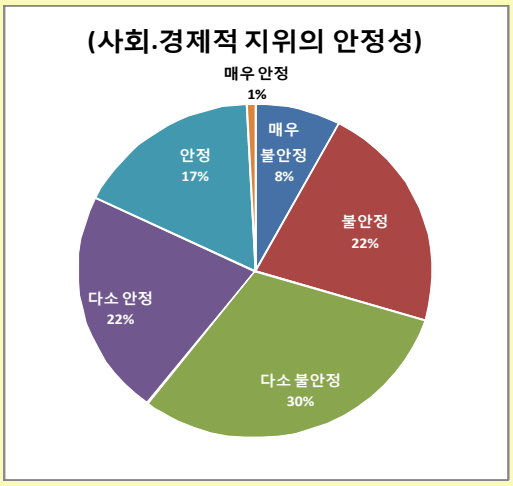
**참고** **국민의 복지인식 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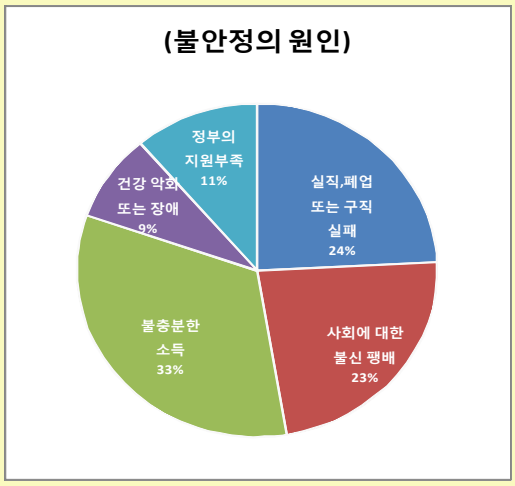
○ 조사기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조사시기 및 표본 허용오차: '12. 11. 21~ 12. 7, 95±3.1%
○ 대상: 일반국민 1,000명(전화), 전문가 100명(이메일)

## 1 사회·경제적 지위의 안정성

○ **일반국민의 60%** 이상이 **자신이 사회경제적으로 불안정** 하다고 응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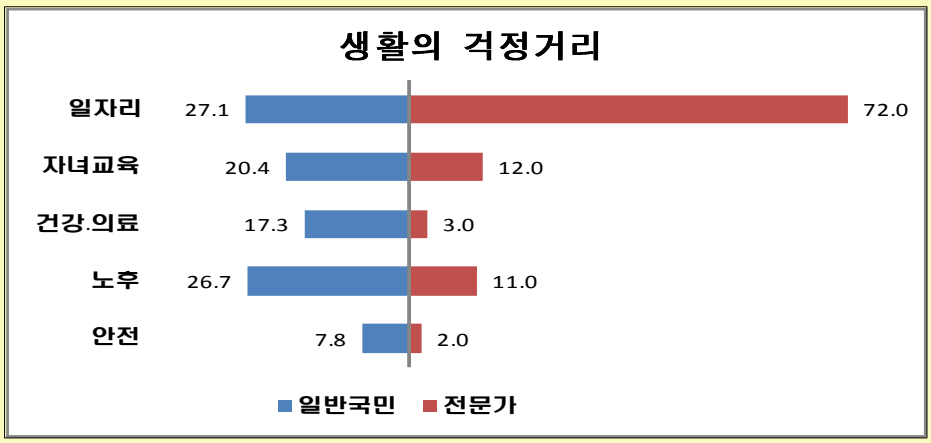
○ 불안정의 원인으로는 **불충분한 소득, 직업 안정성, 사회에 대한 불신**을 주 사유로 응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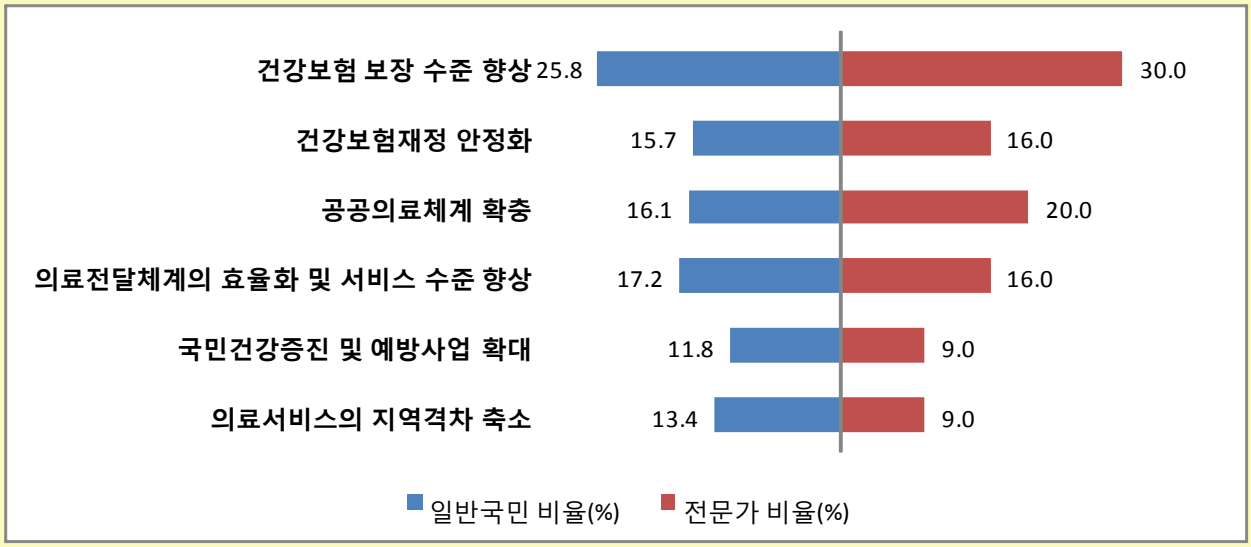

## 2 걱정거리

○ 일반 국민과 전문가 모두 생활하는 데에 **'일자리'**를 가장 크게 걱정, 그 다음으로 **노후와 자녀교육 順**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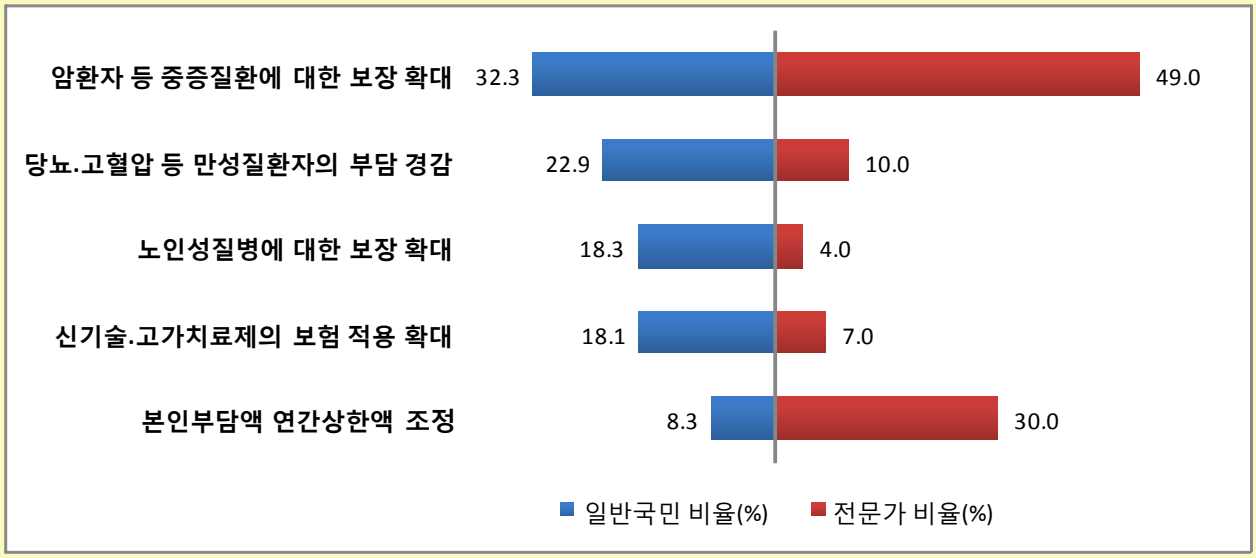
## 3 분야별 정책 우선순위

① **(보건의료정책)** 향후 가장 중점을 두어야 할 보건의료정책에 대해 일반국민과 전문가 모두 **'건강보험의 보장수준 향상'**을 꼽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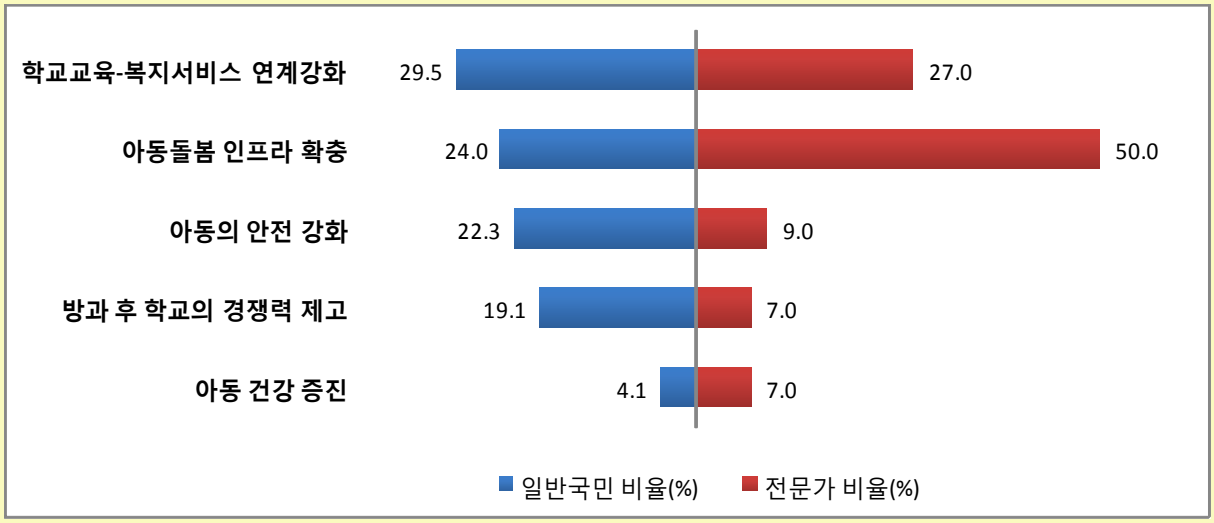

* 1순위로 답한 사람의 비율

② **(건강보험 보장수준 강화 방안)** 건강보험의 보장성을 강화하기 위해서 일반국민과 전문가는 **'암환자 등 중증질환에 대한 보장 확대'**를 우선해야 한다고 응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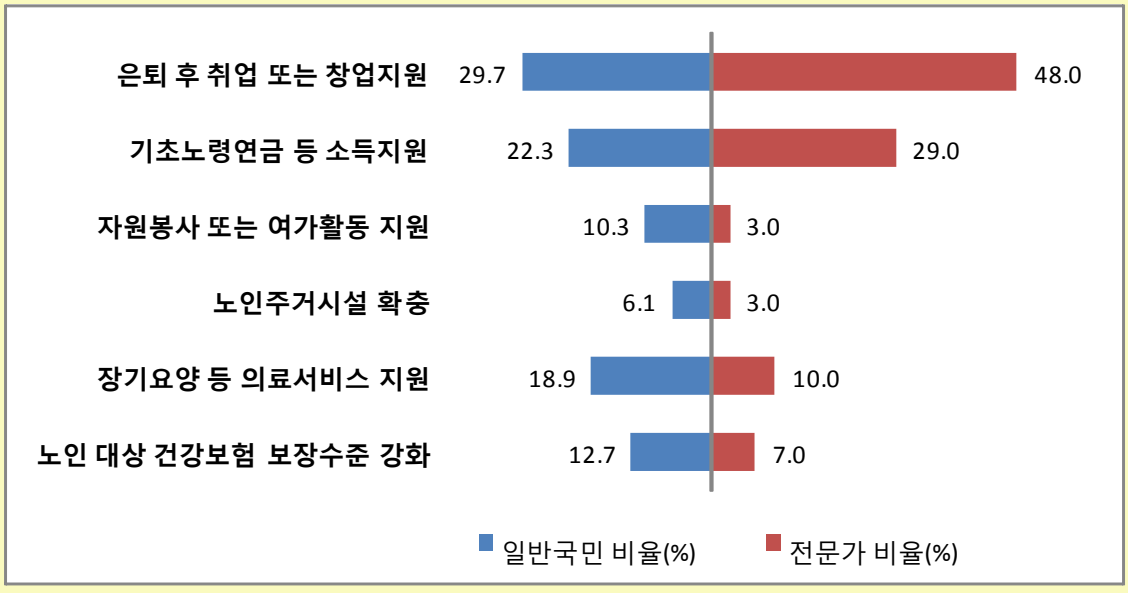

* 1순위로 답한 사람의 비율

③ **(취약계층 아동지원)** 미래세대에 대한 투자로서 취약계층 아동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일반국민**은 **'복지와 교육의 연계 강화'**를, **전문가**는 **'돌봄 인프라 확충'**을 가장 필요한 과제로 꼽음




* 1순위로 답한 사람의 비율

④ **(노후 지원 정책)** 노후 대비를 위해서 일반국민과 전문가 모두 **'은퇴 후 취업 또는 창업지원'**과 **'기초노령연금 등 소득지원'**이 가장 중요하다고 응답




* 1순위로 답한 사람의 비율

# 2 새 정부의 보건복지정책 방향

## 1 비전(Vision) : “국민 100% 행복사회”

□ **“국민 100%”**

○ 정부, 기업, 가족 등 사회 모든 주체간 연계와 협력, 책임을 통하여 **국민대통합을 지향**

○ 저소득·취약계층만이 아닌, **전 국민**이 누릴 수 있는 복지

□ **“행복사회”**

○ 국민의 **삶의 질**과 **행복**을 국정운영의 중심으로 확립

## 2 중점 목표

1 **보다 두터운 중산층 형성**

○ **가계부담 경감·일자리 창출** 등을 통해 **중산층의 빈곤층 탈락 방지**와 **빈곤층의 중산층 재진입**을 촉진

2 **안락하고 건강한 삶**

○ **보다 넓은 보건복지서비스**와 **사전예방적 보건의료체계**를 통해 **안락하고 건강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지원

3 **모두가 함께 가는 사회통합**

○ **소득계층별, 인구집단별 맞춤형 복지**를 강화하여 **사회적 소속감·연대감을 제고**

## 3 추진 체계도


비전
국민 100% 행복사회
목표
• 보다 두터운 중산층 형성
• 안락하고 건강한 삶
• 모두가 함께 가는 사회통합
전략
아동
청장년
노인
취약계층
보건의료
걱정없이 아이를 낳고 키우는 사회환경 조성
일자리 창출을 통한 창조경제 선도
행복한 노후를 위한 국가적 지원체계 구축
대상자별 맞춤형 복지를 통한 사각지대 해소
건강한 삶을 보장하는 보건의료 체계 개혁
국정과제
• 국가가 100% 책임지는 보육지원
• 임신 출산 지원 및 취약아동 보호체계 개편
• 고부가가치 사회서비스 활성화
• 복지 일자리 확충 및 처우개선
• 창조경제 성장동력인 보건산업 육성 강화
• 든든한 노후 소득보장체계 구축
• 건강하고 활기찬 노후생활 지원
• 맞춤형 개별급여체계 도입 및 사각지대 해소
• 근로유인 강화로 일하는 복지 도모
• 전달체계 개편을 통한 체감도 제고
• 장애인의 행복한 삶 지원
• 의료보장성 강화로 국민부담 경감
• 예방적 건강관리체계 구축
• 수요자 중심 보건의료체계 개편
• 지속가능성과 형평성 제고

# Ⅱ. 새 정부 국정과제 실천계획

〔아동〕 걱정없이 아이를 낳고 키우는 사회환경 조성

〔청장년〕 일자리 창출을 통한 창조경제 선도

〔노인〕 행복한 노후를 위한 국가적 지원체계 구축

〔취약계층〕 대상자별 맞춤형 복지를 통한 사각지대 해소

〔보건의료〕 건강한 삶을 보장하는 보건의료체계 개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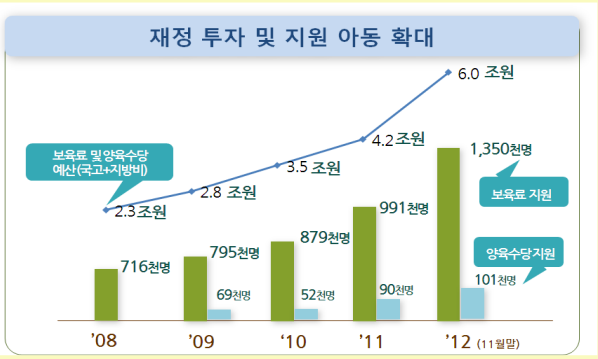
# 아동 걱정없이 아이를 낳고 키우는 사회환경 조성

## ◇ 정책상황 분석

○ 그간 '보육은 미래를 위한 투자' 라는 정책기조에 따라 **국가가 책임지는 보육 지원의 틀**을 **단계적으로 확대**

- 금년 3월부터 **"만 0~5세 전계층 보육·양육 지원" 본격 시행**




- 향후 **특별활동비 등 경감**, 먹거리·시설 **안전관리, 서비스 품질 향상** 및 맞벌이가구 등의 **이용 편의 제고** 등이 남아있는 과제

○ 0~5세 전계층 보육 지원 등 적극적 투자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나라의 출산율은 세계 최저 수준**('12년 1.30명)

- **만혼·노산** 등 사회적 변화와 **임신·출산 부담의 수준** 등을 고려하여 보다 **다각적이고 종합적인 지원**을 추진할 필요

○ 한편, **아동정책**은 아직 일부 취약계층 아동만을 대상으로 하는 **잔여적 정책**에 머물러 있으며, **지원 체계**도 **분절적·단편적**

* 보육을 제외한 아동정책 예산규모는 24백억원 규모에 불과

- **아동 방임과 학대는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아동을 발굴하고 보호하는 체계는 여전히 부족

## ◇ 핵심 정책과제

① 국가가 **100% 책임**지는 **보육지원**

② **임신·출산 지원** 및 **취약아동 보호체계 개편**

# 1 국가가 100% 책임지는 보육지원

## 1 0-5세 보육 국가완전 책임제 내실화

○ **보육료 지원 단가를 현실화**하고, **누리과정 재원은 지방교육재정 교부금으로 일원화**('15년)하여 안정적인 재정지원 체계 마련

* 3-5세 누리과정 단가 : ('12) 17.7~20만원 → ('13) 22만원 → ('16) 30만원
** 누리과정 재원 : ('13~'14) 지방교육교부금+국고·지방비 → ('15) 지방교육교부금

- 저소득 취약계층에 대한 특별활동비 등 지원방안 검토(5월~)

○ 0~5세 보육료 全 계층 지원에 따른 **맞벌이가구 등 어린이집 입소 어려움 해소**를 위해 **실태조사 실시 및 현장 지도·관리 강화**(3월~)

* 입소대기관리시스템 구축 : ('12) 서울 → ('13.下) 전국 확대

○ 적정보육료 산출을 위한 **표준보육비용 계측** 추진(5월~)

## 2 믿고 맡길 수 있는 어린이집 인프라 강화

○ **국공립·공공형 어린이집**을 향후 5년간 **총 2,175개소*** **신규 확충**, 전체 보육아동의 30% 수준('12년, 약 20%) 까지 확대

* 국공립 675개소 : '13년 75개소, '14~'17년 매년 150개소(신축 50 + 전환 100개소)
** 공공형 1,500개소 : '13년 700개소, '14~'17년 매년 200개소

○ 시군구별로 부모·보육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부모 모니터링단' 운영**(3월~)

○ 어린이집 **평가 결과를 세분화**하고(3등급 → 5~6등급), 단계적으로 **평가 결과 공개범위 확대**('13.下) 및 **재정지원 연계** 추진('14.下)

* (현행) 등급 공개 → (1단계) 전체 및 항목별 평가점수 공개 → (2단계) 평가보고서 상세내용 공개

## 3 부모 선택권이 보장된 맞춤형 보육 서비스 제공

○ **일시보육서비스 시범사업을 실시**(5월~)하고, 단계적 확대 추진

○ **육아정보 제공 및 상담, 일시보육** 등 다양한 서비스를 수요자 중심으로 제공 가능한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 확대(6월~, 5개소)

## 2 임신·출산 지원 및 취약아동 보호체계 개편

### 1 임신·출산 부담에 대한 국가책임 강화

○ **고위험산모**에게 고운맘카드(50만원)외 **경비 추가 지원***을 위하여 지원대상 **우선순위 설정**(9월) 및 **사업운영체계 구축**(12월)

* 전체 임산부 중 약 4.2%의 고위험군에게 진료비 추가 지원 추진('14.3월~)

○ **저소득층 가구**의 경제적 부담 경감을 위해 **12개월 이하 영아**에 대한 **기저귀·조제분유 지원방안 마련**(8월)

* 8만 6천명 대상으로 육아·건강 관련 교육과 함께 제공('14.3월~)

○ **신생아집중치료실 추가 확충**('12년 18개소→'13년 24개소)을 통해 고위험 신생아의 진료접근성을 제고('13년 6개 기관 50병상 추가 확충)

○ 분만취약지에 **분만산부인과** 및 **외래산부인과**를 추가 확충하여 안정적 분만환경 조성

* '12년 총 7개소 → '16년까지 총 48개소 확충을 목표로 단계적 확대

○ 분만건수가 적은 산부인과에 대해 **분만가산**(최대200%) **시범사업** 실시

### 2 취약아동 돌봄서비스 내실화

○ **드림스타트 센터 추가 확충**('12년 181개→'13년 211개) 및 **지역사회 복지자원 조정·연계**를 통해 취약아동 발굴 및 지원 강화

* 시군구 내 모든 읍면동까지 사업이 확산될 수 있도록 지원범위 확대 및 센터 기능강화 추진

○ 방과후 돌봄기관인 **지역아동센터**에 대한 **지원을 확대**('12년 3,500개→'13년 3,742개)하고, **관계부처와의 연계 강화***로 촘촘한 안전망을 구축

* 여가·교과·행안부와의 업무협약('12.10월)으로 관계부처 합동 수요조사('13.3월), 연계모델 연구 및 시범사업('13.1~6월)을 추진

○ **아동발달지원계좌 대상**을 요보호아동에서 기초수급가정 아동까지 **점진적으로 확대***하고, **경제교육·후원자 멘토링** 등 다양한 지원 연계

* '12년 47천명→'13년 52천명→'16년 70천명 목표

## 3 아동학대 예방 및 인권보호 강화

○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46개)을 통해 아동학대 신고접수, 현장조사, 사후관리, 상담 등 **학대피해아동 보호 조치 강화**

- 학대피해아동 전용 **치료보호시설 운영** 및 임상심리사 등을 활용하여 **가족지원치유프로그램 운영**(4월~)

○ 학대행위자 **범죄 처벌 강화** 및 10년 간 **아동관련 기관 취업 금지, 재발방지 프로그램 수강 명령제도** 도입 등 제도 강화

* 「아동복지법」 개정 및 「아동학대 방지 및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법무부)」 제정추진

○ 학대행위자로부터 **우선적**으로 **분리 후 사법절차 진행, 피해아동 보호명령**제도 도입, 각종 **정부지원과 연계**하여 **부모교육**을 **의무화**

* 학대행위자 : 접근제한, 통신제한, 친권제한, 후견권 행사 제한, 후견인 변경
피해아동 : 보호위탁·치료위탁·가정위탁

## 4 요보호아동 및 입양아동의 권익 보호

○ **요보호아동**의 개인별 상황과 욕구에 따라 가정위탁, 입양 등 보호 형태를 결정할 수 있는 **판정체계를 구축**하고 **가정보호를 활성화**

○ 입양인에 대한 **체계적인 사후관리서비스 제공**을 위해 국외입양인 **실태조사를 실시하고**(5월) **입양정보통합관리시스템 개편**(6월)

- **헤이그국제아동입양협약** 가입을 위하여 관계자 의견수렴(5월)을 거쳐 **이행입법안**을 **마련**하고, **국회 입법 추진**

**< 헤이그국제아동입양협약 개요 >**

▷ (**목적**) 국제입양 시 **아동의 기본권보호 및 안전을 보장**(91개국 가입)

▷ (**내용**) 아동에 대한 **가정보호 원칙** (친가정→국내가정→국제입양)

· **협정당사국 중앙국가기관**이 조사·상담을 통해 **입양의 적정성을 심사**하고 입양아동과 입양부모에 대한 **보고서를 작성·교환**

▷ (**효과**) 아동 출신국에서 허가된 입양은 수령국에서도 효력 인정

# 청장년 일자리 창출을 통한 창조경제 선도

## ◇ 정책상황 분석

○ **보건 및 사회복지서비스**는 **일자리 창출의 핵심 영역**으로서 그간 '고용 없는 성장' 추세 속에서도 **일자리 창출을 주도**

**< 최근 5년간 취업자 증감 규모 >**

| 전년 대비 | '09 | '10 | '11 | '12 | '08～'12 |
|---|---|---|---|---|---|
| 전체 취업자 증감(만명) | △7 | 32 | 42 | 44 | 111 |
| 보건복지 취업자 증감(만명) | 16 | 16 | 16 | 9 | 57 |

- 또한 ①복지혜택 확대, ②종사자 일자리 창출, ③여성 등 가족의 경제활동 참여 등 **선순환구조**를 통해 **경제활력 강화에 기여**

- 그러나, **재정투자**는 지난 10년간 보육·요양 등 돌봄서비스를 중심으로 확대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OECD의 60% 수준에 불과**

  * GDP 대비 공공사회서비스 지출('09년) : 韓 5.5%, OECD 평균 9.0%

○ 한편, **보건의료산업**은 잠재력이 큰 **창조경제를 선도하는 핵심 산업**으로서 **범정부적 적극적 투자가 필요**

- 제약·의료서비스 등 **차세대 산업분야의 블루오션**(Blue Ocean)이자 **일자리 창출의 보고(寶庫)** 역할 가능

  * 전 세계적으로 향후 10년간 신규 부가가치 창출의 40%(4조$)를 차지할 전망(Bain & co)
  * 보건의료 취업유발계수는 15.8명(10억원당)로 제조업(9.4명) 대비 높은 수준

## ◇ 핵심 정책과제

① **고부가가치 사회서비스 활성화**

② **복지일자리 확충** 및 **처우개선**

③ **창조경제 성장동력**인 **보건산업 육성 강화**

# 1 고부가가치 사회서비스 활성화

## 1 범부처 고부가가치 사회서비스 일자리 창출

○ **돌봄, 건강관리, 상담** 등 국민적 수요가 큰 **유망사회서비스 및 부처간 융·복합 서비스를 발굴**해 **확대·제도화**

○ 노인, 장애인, 여성 등 **취약계층 직접일자리 지원 사업 확대**

* (복지부) 노인일자리 지원, 장애인복지일자리지원 (교과부) 배움터지키기 (문화부) 문화관광해설사, 궁능방재시스템 구축 등

○ **범부처 「사회서비스 일자리 창출계획」 수립 및 발표**(11월)

**< 사회서비스 일자리 창출계획(안) >**

◈ **대상별 돌봄 서비스 확대**

- (아동) 방과 후 돌봄사업을 개편·확대하고 학습지원·문화예술 교육 등과 접목
- (취약계층) 장애인활동지원, 노인장기요양서비스 등 확대

◈ **여성, 청년, 베이비부머의 사회참여 강화**

- 직업훈련 및 취업지원, 평생학습 지원, 직접 일자리 지원

◈ **아동, 중장년층 등 건강관리 강화**

- 어르신 생활체육지도사, 학교 스포츠 강사 확대 배치 및 스포츠 바우처 확대, 건강생활서비스 제도화 검토

◈ **문화 인프라 등 각종 시설·인프라 구축**

- 복합문화 커뮤니티센터 조성, 탈북민 문화센터 건립, 지역별 문화복지사 배치, 청소년 수련시설·쉼터 확충

◈ **아동, 직장인 등 정신건강 분야, 여성·가족 분야 등 상담 강화**

- 학교 폭력 관련 학교 전문 상담인력 배치 확대, 직장인 직무스트레스 관리 프로그램 지원
- 가정폭력·성폭력피해자 상담 및 법률구조, 생애주기별 부모교육 지원

◈ **사회복지전달체계 개편을 통한 공공 일자리 확충**

## 2 사회서비스 산업화 기반 및 시장 활성화 방안 마련

○ **「사회서비스산업 진흥계획」을 수립**하여(6월) 세제·금융, 컨설팅 지원, 벤처 육성, 서비스 제공기관 전문화 촉진 등을 체계적으로 추진

○ 품질과 부가서비스에 따라 **일정 범위 내 서비스 가격을 자율화**하고, 소득 수준에 따라 **본인부담금 차등화 확대**

○ **사회서비스 R&D 투자를 강화**하여 고부가가치 **사회서비스 개발** 및 기존 서비스의 **품질·생산성 혁신** 촉진('12년 10억원→'13년 20억원)

○ **사회서비스산업 특수분류 신설**(12월)을 통해 부가가치·매출 규모 등 사회서비스 공급 현황 파악 및 정책적 지원 근거 마련

## 3 사회서비스 재정지원 및 제공방식 효율화

○ 지자체가 지역 특성에 맞추어 사회서비스 예산을 탄력적으로 집행할 수 있도록 **사회서비스 포괄보조 제도 확대 적용 추진**

○ 다양한 이용자 지원방식의 사회서비스 사업을 수용할 수 있는 **바우처 통합관리시스템 구축**

- 각 부처 사회서비스 **업무체계 분석 및 정보화전략계획** 수립(~12월)

## 4 사회서비스 품질관리체계 구축

○ 사회서비스의 종합적·체계적 품질관리를 위한 (가칭) **「사회서비스 품질관리 및 사업지원 관리에 관한 법률」 제정** 추진('13.下)

* 서비스 최저기준 설정 및 품질관리, 산업 진흥, 전문인력 양성 등 규정

○ 중장기적으로 품질기준 마련 및 평가, 인력관리 지원 등을 수행할 **품질관리 전담 기구**(가칭 「사회서비스 품질관리원」) **설치 검토**

## 2 복지 일자리 확충 및 처우개선

### 1 민간·공공 사회복지 인력 확충

○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보수 및 근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13.下), 결과를 토대로 **생활시설 3교대 근무 도입방안*** **마련**(12월)

* 생활시설 교대 근무제에 따른 소요인력 추계 등 포함

○ **주민센터 기능 개편** 및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개별급여 전환 등 **복지 수급자 확대**에 따라 **복지직 공무원 및 전문인력 추가 확충** 추진

### 2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근무여건 개선

○ 지방이양사업은 **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 인상**(1월) 및 **지자체 준수를 유도***하여 급여 수준을 현실화

* 지자체별로 인건비 준수율을 조사하여 공표(6월)

- **국고보조**(지역자활센터, 지역아동센터 등) 및 **보험수가** 적용사업(노인장기요양)의 경우 **시설 운영비 인상 및 수가 인상** 등 지속 실시

- 종사자 보수·근로 실태조사 및 **장기 근속자 포상** 추진(9월)

○ **사회복무요원 배정 비중**을 단계적으로 **확대** 추진('13년 26.4%→'17년 40%)하고, 격무지 근무 요원 **심화교육 시범실시**('13.下) 후 점차 확대

### 3 돌봄 서비스 종사자 처우개선

○ 종사자 권익보호를 위해 임금 구성항목, 근로·휴게시간 및 고충처리 방법 등을 명시한 **표준 근로계약서 적용**('13년~)

* 가사간병, 노인돌봄종합, 장애인활동지원, 산모신생아도우미 등 4대 돌봄 바우처 중심으로 표준 근로계약서 마련·배포

○ 다양한 유형의 **종사자 임금체계 가이드라인을 제시**하여 합리적 급여 책정 유도('13.下)

○ 고용형태 및 근로시간, 4대보험 가입 여부 등 **고용현황 모니터링 강화**

## 3 창조경제 성장동력인 보건산업 육성 강화

### 1 해외환자유치 및 한국의료 글로벌 진출 촉진

○ 해외환자 유치채널 다양화를 위해 **보험사의 해외환자 유치활동을 허용**(의료법 개정 추진)

○ 의료통역사·의료코디네이터 등 **해외환자 유치 전문인력 양성**

* 아랍어 학과 내 '예비통역과정' 신설('13), 글로벌 인재양성 센터 설립('15) 추진

○ **의료기관 해외 진출 촉진**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

○ **병원 해외진출 사업**을 기획·집행할 수 있는 **전문기관 설립·육성**

* 보건산업진흥원, 산업은행 및 의료기관 등이 공동 출자, 민·관 합작 회사 형태로 설립(3월)

○ 세계 전통의약 시장 대표 브랜드 도약을 위한 **「한의약 세계화 중장기 계획」 수립**(5월) 및 **한방 병·의원 해외환자유치 컨설팅 실시**(5월~)

* 전통의약 지식재산 보호 체계 구축, 한의약 세계화 거점 구축 및 교류 활성화 등 포함
* 2013 산청 세계전통의약엑스포 개최(9~10월)

### 2 제약산업 글로벌 10대 강국 도약

○ 범부처 **「제약산업 육성 지원 5개년 종합계획」을 수립**하여(4월) 혁신형 제약기업 육성, R&D 확대 등 추진

○ 정부 출자 **「글로벌 제약산업 육성 펀드**(약 1천억원 규모)**」를 조성**하여(5월) 해외 기술제휴, 전략적 M&A 등 해외진출 본격화

○ **제약분야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대학원 운영**(2개소, 3월~) 및 해외진출 **전문인력 대상 교육** 개시(5월~)

○ 투명한 유통시장 조성을 위하여 **리베이트 적발 기업**에 대한 **처분기준 강화** 및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 참여 제한**(4월)

### 3 의료기기 및 화장품 산업 육성

○ 첨단 의료기기 산업 육성의 **제도적 기반 마련**을 위해 **「의료기기 산업 육성·지원법」** 제정('13.下) 및 **중장기 발전계획** 수립(5월) 추진

- **'의료기기산업 특성화대학원' 설립**(5월~)을 통해 전문인력을 양성하고, 해외진출 활성화를 위한 **해외 의료기기 종합지원센터** 설치(5월~)

○ **「화장품 산업 중장기 발전계획」 수립**(6월) 및 **국가별 피부특성은행 구축 확대**('12년 4개국→'13년 7개국)

### 4 전략적 보건의료기술 R&D 투자 확대

○ **「범부처 국민건강 R&D 중장기 추진계획」 수립**(4월)을 통해 미래 기술개발이 시급한 분야에 대한 투자 강화

○ **연구중심병원을 지정**하고(3월), 산학연 연계를 통한 **첨단의료 기술 개발 허브로 육성**

* 연구중심병원을 2개 그룹(상급종합병원/종합·치과·한방·전문병원) 으로 구분·지정, 향후 3년에 걸쳐 10여개 내외 병원 지정

○ 유전체 연구에 기반한 **'맞춤의료(Personalized Medicine)'** 기술개발 및 산업화 촉진을 위해 **「유전체 맞춤의료 기술개발촉진법」 제정 추진**(12월)

### 5 고령친화산업 육성

○ 복지형 헬스케어 융합제품 등 **고령친화 우수제품에 대한 지원방안 마련**(4월), **우수제품 시험 비용 지원**(5월~)

○ **친고령·항노화 유망 기술·제품분야를 선정**하여 **R&D 지원**(9월)

* 자동수욕시스템, 신체기능대체물 등 복지수요 대응 분야 및 바이오 의료기기 등

# 노인 행복한 노후를 위한 국가적 지원체계 구축

## ◇ 정책상황 분석

○ 현세대 **노인의 절반이 빈곤**함에도 불구, 국민연금의 짧은 역사로 인해 **노인의 소득보장 체계는 크게 미흡**

* 우리나라 노인빈곤율(중위소득 50%이하)은 45.1%로 OECD국가 중 1위(OECD 평균 13.5%)
* 국민연금 : 65세이상 노인중 수급자 30.1%, 연금액 30만원(최소필요자금 183만원의 16.4%)

○ 급격한 고령화로 인한 **노인의 돌봄과 건강 문제**가 향후 **중요 정책사안**이 될 전망이나, **제도적 준비는 아직 미흡**

- **요양보험제도**는 중증 중심으로 설계되어, 돌봄 수요가 큰 **치매 환자 등에 대한 보장은 아직 낮은 수준**

* 노인인구 중 장기요양수급자 비율은 한국 5.8%('12), OECD 평균 11%('11)

- 점차 늘어나는 노인의료비를 고려할 때 **노인에 대한 의료보장, 치료·요양체계**(요양병원-시설)의 **효율화** 등도 대비할 필요

○ 가족구조 변화·부양의식 약화 등으로 **취약 독거노인은 점차 증가**하고 있으나, **사회적 돌봄을 받는 독거노인은 19%(23만명)에 불과**

* 정부 및 민간의 돌봄이 필요한 요보호 독거노인은 약 40만명으로 추정

○ 건강한 노인들에게 **일자리, 사회공헌** 등 적절한 활동의 장(場)을 국가가 마련해 주는 것이 **고령화 시대에 꼭 필요한 과제로 대두**

## ◇ 핵심 정책과제

① 든든한 노후 소득보장체계 구축

② 건강하고 활기찬 노후생활 지원

# 1 든든한 노후 소득보장체계 구축

## 1 안정적 노후소득보장을 위한 기초연금 도입

○ 기초연금을 도입하여 **65세 이상 노인**에 **1인 1연금** 적용

**<제도 설계 주요내용(인수위 안)>**

○ (재원조달) **조세**로 충당

○ (대상자) **65세 이상 노인**(특수직역연금 수급자·배우자 예외)

○ (연금액) 연금액이 현행 수준보다 높아져 **누구에게나 이득**이 되는 제도로 설계
**(1인당 최대 20만원** 지급)

○ (시행시기) **'14년 7월**부터 시행

○ **사회적 합의**를 위한 민관 합동의 **「국민행복연금위원회」 설치·운영**(3월~) 및 **법률 정비 완료**(~12월)

## 2 연금제도 내실화를 위한 제도개혁

○ **제3차 재정계산**을 통해 **재정추계 결과 발표**(3월) 및 **중장기적인 제도개선방안*** **수립**(10월)

* 다층노후소득보장체계 구축 방안, 중장기 재정안정화방안 및 기금운용방향 등

○ 국민연금 **적용제외자 범위 축소** 등 **가입자 관리방안 개선 및 급여제도 합리화 추진**(국민연금법 개정 추진)

○ 현행 **저임금 근로자 연금보험료 지원사업**의 **지원대상 기준 및 지원율을 상향 조정**

* ('12년) 10인 미만 사업장 125만원 미만 근로자 보험료의 1/3~1/2 지원
('13년) 10인 미만 사업장 130만원 미만 근로자 보험료의 1/3~1/2 지원(1~3월)
→ 1/2 지원(4월~12월)

## 2 건강하고 활기찬 노후생활 지원

### 1 치매 및 요양필요 노인 보호 확대

○ 치매 노인 및 가족의 요양부담 완화를 위해 **노인장기요양보험 수혜 규모**를 34만명에서 **56만명**('17, 노인인구의 7.8% 수준)**까지 확대**

- 현행 **3등급 인정기준 완화** 및 **인지기능 비중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등급판정도구 개편 시행**(7월)

- 등급외 치매환자를 대상으로 가칭 **'치매특별등급' 시범사업 실시**('13.下) 및 본격 시행('14.7월)

○ 국가건강검진의 **치매검사항목 개선안을 마련**(6월)하고, 치매환자 약제비* 지급대상을 확대(전국가구 평균소득 50%→100%)

○ 경증 치매환자 보호를 위한 **주·야간보호 시설을 확충**하고('12. 13백개소 → '17. 19백개소), **치매거점병원 모델 개발 및 지원방안 마련** 등 인프라 강화

### 2 노인 의료 지원체계 강화

○ **요양병원 의무인증제** 정착(1월 도입) 및 **안전시설 기준 강화**('13.上)

* 3년 이내 전체 요양병원 인증조사 완료('13년 200개→'14년 500개→'15년 500개)

○ 노인을 중심에 두는 **'의료-요양 연계체계' 구축방안 마련**(10월)

**<의료-요양 연계체계 주요내용(안)>**

○ 수술 후 **회복·전문재활 서비스**를 제공하는 **회복병원체계 강화**

○ 요양시설·재가에서 의료서비스가 적절하게 제공되도록 **통합서비스**(의료+요양+생활) **활성화 방안** 마련

○ **호스피스, 가정간호** 등 **존엄한 죽음**을 위한 **의료지원체계 확충**

### 3 독거노인 돌봄시스템 강화

○ **거동불편 독거노인**의 경우 **노인돌봄종합서비스 우선 지원대상자로 선정**(3월~)하여 보호 범위를 확대

- 골절, 중증질환 수술 직후 등 일시적인 거동불편 독거노인에 대한 **단기 가사·활동지원 서비스 시범실시**(3월~) 후 확대 추진

○ 노인일자리 사업 중 건강한 노인이 거동불편 노인을 방문·지원하는 **노노(老-老)케어 일자리 확충**방안 마련(7월)

○ **저소득 독거노인**에 대한 **노인일자리 우선제공 및 참여기간 연장**('13년 신규, 3천명, 7개월→12개월)을 통해 소득보전 지원

### 4 노인일자리 확대 및 사회참여 활성화

○ **연간 5만개의 노인일자리 추가 확충, 참여 보수 및 기간 확대** 등을 내용으로 하는 **「노인일자리 확충 종합계획」 수립**(7월)

**< 연도별 노인일자리 확충계획(안) >**

| 구분 | 2013 | 2014 | 2015 | 2016 | 2017 |
|---|---|---|---|---|---|
| 노인일자리 (기본형) | 9개월 (20만원) | 9개월 (25만원) | 10개월 (25만원) | 10개월 (30만원) | 10개월 (30만원) |
| 노인일자리 (복지형) | 9개월 (20만원) | 12개월 (25만원) | 12개월 (30만원) | 12개월 (35만원) | 12개월 (40만원) |

○ **일자리 다양화** 및 지속가능한 **노인적합 일자리 발굴·보급**

- **(사회공헌형)** 노인의 경험과 지식을 활용하여 **지역사회 돌봄 및 안전**에 기여할 수 있는 노인일자리 확대('13. 20만개, 7개월→9개월)

- **(시장형) 시니어인턴십** 활성화(4,100명) 및 **고령자 친화기업**(20개소) 설립 지원 등 시장에서 경쟁력 있는 노인 일자리 육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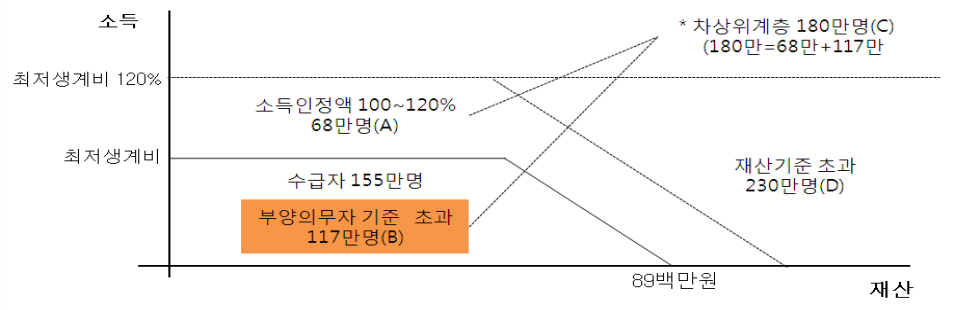
○ 전 생애에 걸쳐 스스로 미리 노후를 준비할 수 있도록 **노후설계교육 시행**(4월~, 10만명 목표) 및 (가칭)**「노후설계지원법」 제정** 추진

# 취약계층 대상자별 맞춤형 복지를 통한 사각지대 해소

## ◇ 정책상황 분석

○ 기초생활보장제도를 중심으로 하는 공공부조 제도의 **광범위한 사각지대 존재**

<복지사각지대 추정>




- 엄격한 부양의무자 기준 등으로 인하여 **비수급 빈곤층이 발생**하고, 차상위계층 등 **잠재적 빈곤위험계층**에 대한 **대응 미흡**

* 기초생활보장제도 신청 탈락이유 중 74.2%가 부양의무자 기준 초과

○ **통합급여체계**(All or Nothing), **수급자에게 집중된 복지혜택**으로 인해 **탈수급 유인이 약하며, 근로유인형 정책기제도 부족**

- 공급자 중심의 부처별·부서별 분절적 시스템으로 인해 **복지와 고용연계 서비스**가 수요자 입장에서 **원스톱으로 진행되기 어려움**

○ **장애인** 등 취약계층에 대해 **지역사회 중심의 종합적 접근이 미흡**하여 **소외계층 발굴** 및 **효율적인 복지자원 활용에 한계**

## ◇ 핵심 정책과제

① **맞춤형 개별급여체계 도입** 및 **사각지대 해소**

② **근로유인 강화**를 통한 **'일하는 복지'** 도모

③ **전달체계 개편**을 통한 **복지체감도 제고**

④ **장애인의 행복한 삶 지원**

# 1 맞춤형 개별급여체계 도입 및 사각지대 해소

## 1 기초생활보장제도를 욕구별 맞춤형 개별급여체계로 전환

○ 단일 기준에 의해 모든 급여 자격이 일괄적으로 정해지는 **통합급여체계를 개편**하여 **욕구별 맞춤형 개별급여**로 전환 추진(~'14.下)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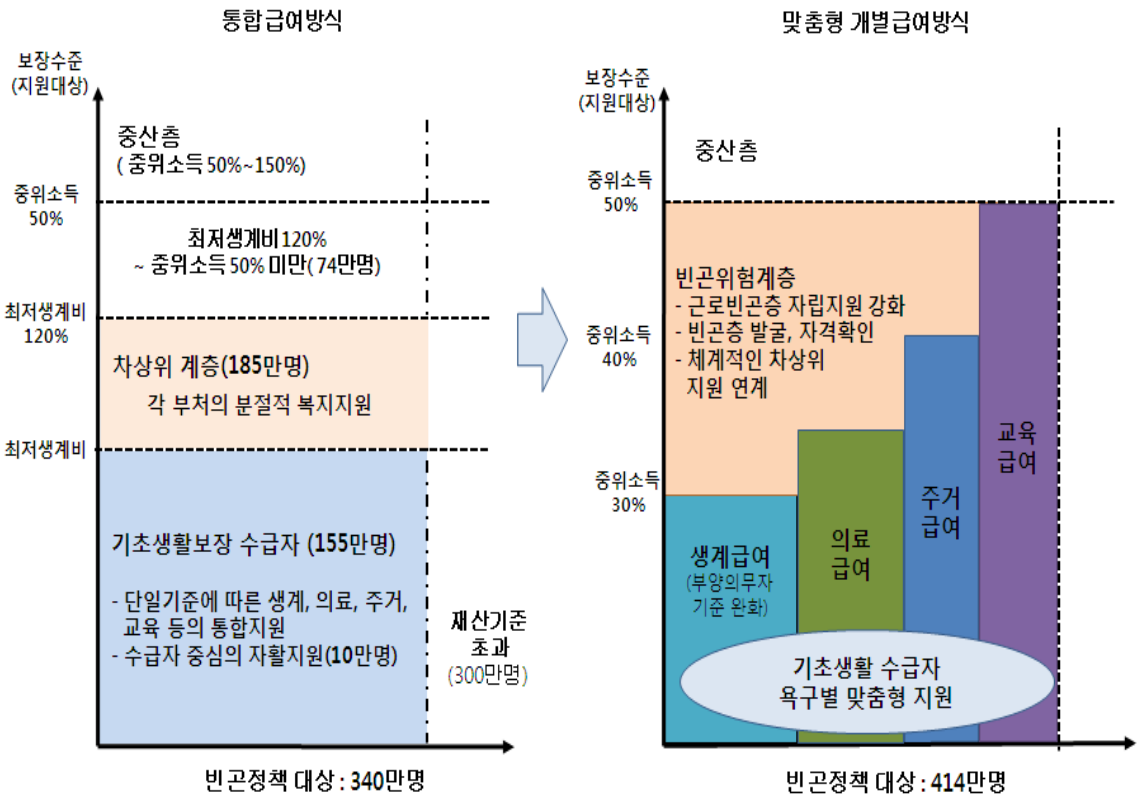
- **생계, 주거, 교육급여**를 분리, **별도 선정 및 급여 기준을 마련**

○ **주거·교육급여, 에너지 지원** 등 **관계부처 지원**도 **개별급여체계 개편에 따라 통합, 연계·지원**함으로써 수혜자 체감도를 제고

* 각 부처의 복지급여 제공에 대해 중복·누락이 발생하지 않도록 중앙생활보장위원회를 통해 총괄 조정 및 연계 강화

○ 국무총리 주재 「사회보장위원회」 논의를 거쳐 **「맞춤형 급여체계 개편방향」을 확정**하고(4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정 추진**('13.下)

**<맞춤형 복지지원 전환 개념도>**



## 2 빈곤정책 사각지대 해소

○ 부양의무자가 수급자를 부양하고도 중위소득 수준의 생활이 가능하도록 **부양의무자 소득기준 현실화 추진**

* 소득기준을 중위소득 수준(현재)→'중위+수급자가구 최저생계비'(개선)로 완화

- 개별급여체계 전환 시 급여별 선정기준의 개선과 병행하여 검토

○ **빈곤위험계층 보호**를 위해 **법정 차상위 기준을 상향 조정**하고 (최저생계비 120%→중위소득 50%) 각 부처 **복지사업 지원을 확대**

○ 지역 자원봉사자로 구성된 **"좋은 이웃들" 사업지역을 확대**('12년 30개소→'13년 40개소), **복지소외계층 발굴 및 복지자원 연계 추진**

## 3 공공-민간 복지자원 활용 극대화

○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활성화방안**을 마련(5월)하고, **공공-민간 복지자원 통합시스템 운용***을 통해 민간자원 발굴 및 활용도 제고

* (공공)범정부 및 지자체 복지자원과 (민간)복지시설 및 디딤돌 복지자원을 연계 통합하여 '13년 2월부터 서비스 개시

○ 나눔문화 확산을 위한 **기부연금제도 도입, 세제지원 확대 방안 마련 등 제도적 기반 구축**

- **나눔교육센터 설립**(4월), 나눔 활동 **국민참여 캠페인** 전개

## 2 근로유인 강화를 통한 '일하는 복지' 도모

### 1 근로유인형 급여체계 구축

○ 미취업수급자보다 **취업자**가, 보호된 시장에서 일하는 것보다 **일반시장**에서 일할수록 **더 유리한 급여체계로 개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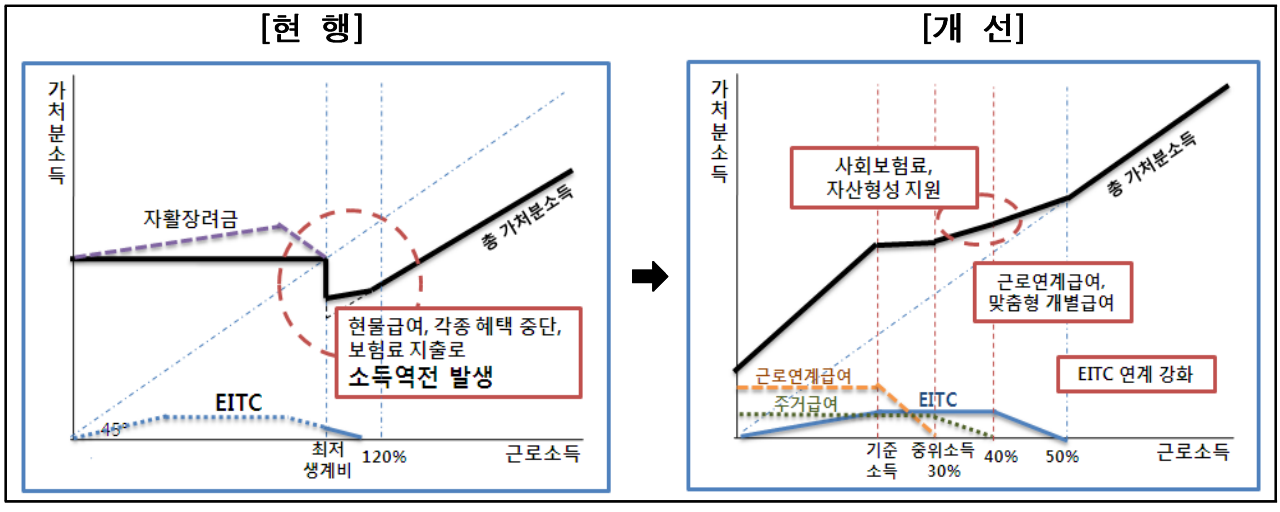
-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획일적 통합급여체계를 생계·주거·교육·자활 등 **맞춤형 개별급여체계로 개편**
- **자활급여의 임금현실화**로 '일을 통한 소득보장' 지원
- 급여체계 개편과 연계하여, **기초수급자까지 근로장려세제(EITC)를 '14년부터 전면 적용**(기재부 협조)
- 근로무능력 가구원이 있는 경우 등에는 최저생활보장을 위해 **'근로연계급여'를 지급**하는 방안 검토

* 일하는 수급자에 대해 EITC, 근로연계급여 지급 등을 통해 열심히 일할수록 종전보다 가처분소득이 증가

- 희망키움통장 등 **자산형성 지원대상**을 일반시장 취·창업 수급자에서 **자활사업 참여자 및 차상위층까지 확대**

○ **「근로유인형 급여체계 구축 방안」**에 대해 **사회보장위원회 심의**(4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정 추진**('13.下)

**< 근로유인형 급여체계 도입에 따른 기대효과 >**



## 2 맞춤형 고용-복지서비스 연계 강화

○ 수요자 맞춤형 **일자리-복지 통합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지자체 일선 전달체계에 (가칭)**「내일행복지원단*」 시범운영 추진**(10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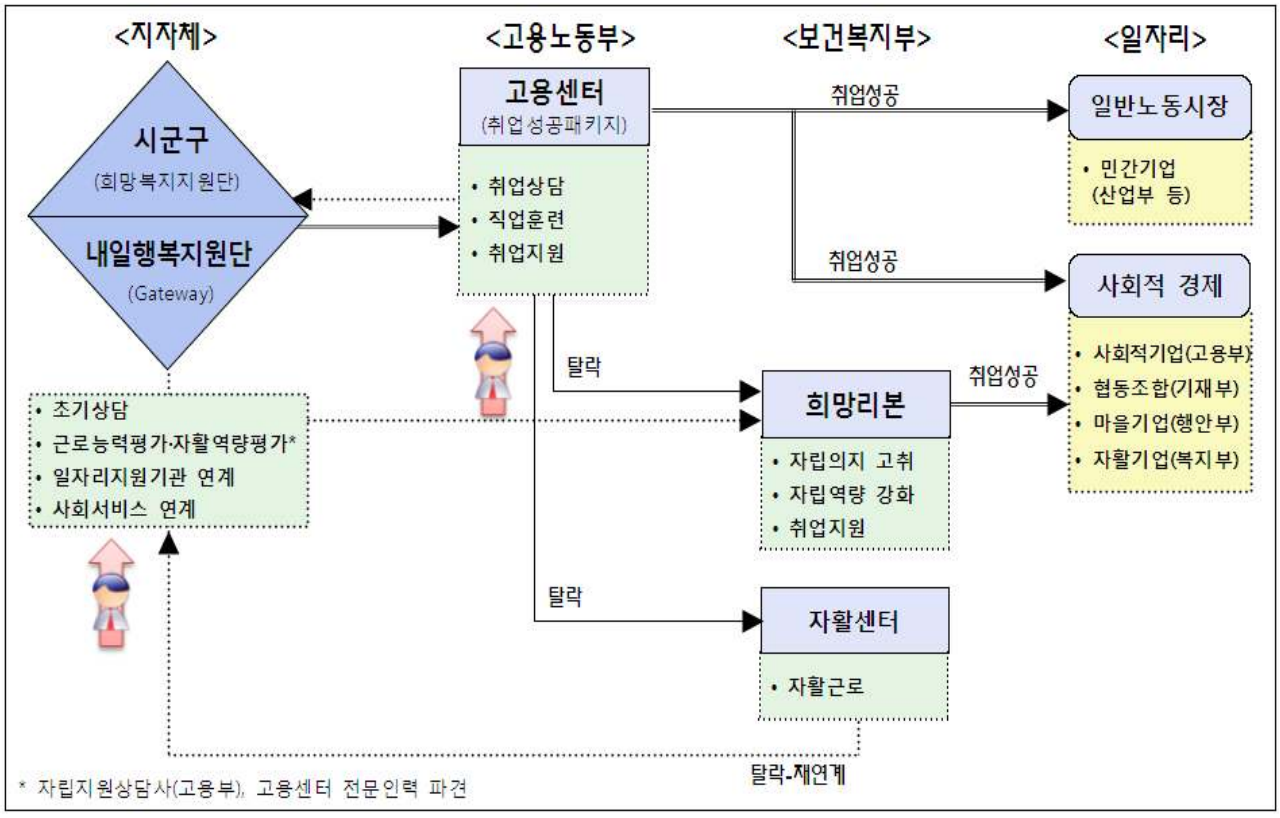
* 각 부처 및 지자체 일자리지원기관과 연계(고용센터, 일자리지원센터 등)

○ **근로능력 있는 저소득층**은 **고용센터**(취업성공패키지)에서 **우선 지원**하되, **취업이 곤란**한 경우 **특화프로그램**(희망리본, 자활센터)을 **연계 지원**

* 시·군·구 희망복지지원단과 연계하여 의료·교육·문화·주거 등 사회서비스를 지원하고, 사회복지통합관리망(복지부) - 일모아시스템(고용부) 연계 추진

○ 저소득층의 체계적 자립 지원을 위하여 **「빈곤의 예방과 탈빈곤 지원을 위한 자립지원법(안)」 제정** 추진('14년)

**< 고용-복지서비스 연계 모형 >**



## 3 전달체계 개편을 통한 복지체감도 제고

### 1 주민센터를 맞춤형 복지 허브기관으로 개편

○ 동(洞) 주민센터를 개편하여 **지역 주민의 접근성·편의성**을 고려한 **맞춤형 복지서비스 제공체계** 구축

- **맞춤형 급여·서비스 신청, 통합사례관리, 고용-복지 연계서비스, 사회적 경제**(사회적 협동조합, 사회적기업) **및 지역공동체 활성화** 등 지원

○ **일선 공무원의 과중한 업무부담**('깔때기' 현상) **경감**을 위한 **전담 인력 확충** 및 **복지제도·기준 정비**

○ 관계부처 합동 TF를 구성하여(3월) **개편방안 발표**(7월, 사회보장위원회)

**<주민센터 개편방안>**

◇ **市/區 지역** : 동(洞) 주민센터를 **지역 특성**에 맞추어 **3가지 유형으로** 개편

① **거점형** : 3개 내외 동 단위의 복지 기능 전담 기구 설치
② **기능보강형** : 현 주민센터를 유지하되, 복지인력을 확충하여 복지기능 강화
③ **통합형** : 3개 내외 동(洞)을 통합, 일반행정과 복지행정 병행 처리

◇ **郡 지역** : 본청 희망복지지원단 보강 및 보건의료서비스 연계 강화

### 2 사회보장정보시스템 확대 구축

○ 복지사업 **중복·부적정 수급을 방지, 맞춤형 복지서비스 제공**을 위한 **사회보장정보시스템 구축**

- 복지사업 정보 연계 확대(8월), 생활조정수당(보훈처) 등 **업무처리지원 시스템 구축, 수급적정성 확인조사 기반 마련**('13.下)

- 복지대상자에 대한 **서비스 의뢰시스템*** 및 **통합 상담·사례관리 시스템** 구축(12월)

* 각 부처(기관)와 지자체에서 발굴한 대상자에 대해 필요한 서비스를 상호간에 의뢰

○ (가칭)**「사회보장급여 이용 및 제공에 관한 법률」을 제정**('13.下), 범부처 복지사업 운영 및 시스템 활용 지원근거 확충

# 4 장애인의 행복한 삶 지원

## 1 장애인에 대한 포괄적 국가책임 강화

○ **발달장애인법을 제정**하고 발달장애인 부모교육 및 상담지원, 성년 후견제 이용지원 등 **관련 서비스를 지속 확대**(7월~)

* 당사자단체, 국회, 관계부처 등 협의를 거쳐 「발달장애인법」 입법 추진

○ 사회적 합의를 바탕으로 **장애인연금 급여 인상 및 대상 확대를 추진**하되, 기초연금 제도 도입방향에 맞춰 시행

## 2 중증장애인 상시 돌봄체계 마련

○ **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 적용대상을 1급에서 **2급까지 확대**(1월~)

- **장애아동 기본급여**를 **확대**하고('12년 최대 월62시간→'13년 107시간), **최중증 독거가구** 등은 1일 최대 12시간까지 **급여 제공**(3월~)

○ 화재 등 응급상황에 신속히 대처할 수 있도록 소방방재청의 U-119 시스템과 연계한 **중증장애인 응급안전시스템 구축·운영**('13.下)

○ 심신상태, 생활환경, 일상·사회생활 등을 바탕으로 장애인의 다양한 욕구에 부응하는 지역사회 기반 **「중증장애인 보호 종합대책」 수립**(12월)

## 3 공공의료체계 강화로 장애인 건강권 보장

○ 권역별 재활병원을 통해 입원장애인 등을 대상으로 사회복귀 지원 프로그램, 방문재활프로그램 등 **공공재활프로그램 시행**(3월~)

○ 지역사회재활 거점보건소(80개소)를 통해 재활치료, 건강관리 등 **장애인 재활·건강증진 프로그램 시행**(3월~)

# 보건의료 건강한 삶을 보장하는 보건의료체계 개혁

## ◇ 정책상황 분석

○ 의료이용 및 비급여 증가에 따라 **건강보험 보장률은 60%대 수준** ('04년 61.3% → '11년 63.0%)

- 암·심뇌혈관질환 등 **중증질환**으로 인한 **재난적 의료비 지출**은 **중산층을 빈곤층으로 전락**시킬 가능성이 높은 **위험요소**

  * 전체가구 중 9.7%가 가처분소득의 30%를 넘는 재난적 의료비 경험(신영전 등, 2010)

○ 흡연·음주 등 **나쁜 생활습관→만성질환→중증질환**으로 진행되면서 **만성질환 유병률이 증가**하는 상황이나,

- 담배·주류 등 건강위협요인 규제, 만성질환자 지속관리 등 **예방적 보건의료체계는 미흡**

  * '09년 기준 국민 20세 이상 성인 54.3%가 평균 2.5개의 만성질환 보유
  * 고혈압 총진료비/환자수 : '02년 8,581억원/273만명 → '10년 2조4,898억원/513만명

○ 의원-병원-종합병원 등 **의료기관 종별 기능이 미분화**되어 의원과 병원간 **과잉경쟁, 수요자 중심의 서비스 미흡** 등 발생

- **응급의료** 등 국가 책임 의료영역에 대한 **투자는 아직 부족**

○ 한편, 고령화·의료기술 발전 등으로 **국민의료비 급증이 예상**되나, 이를 **효율적으로 통제할 수 있는 장치는 부족**

  * 건강보험 수입·지출구조의 비효율, 의료자원 분포·구성 편중 등

## ◇ 핵심 정책과제

① **의료보장성 강화**로 **국민부담 경감**

② **예방적 건강관리체계** 구축

③ **수요자 중심 보건의료체계 개편**

④ 보건의료의 **지속가능성과 형평성 제고**

# 1 의료보장성 강화로 국민부담 경감

## 1 4대 중증질환에 대한 의료비 국가 부담

○ **4대 중증질환 등 중기('14~'18) 보장성 계획을 수립**하고, 4대 중증질환 **초음파 급여화**를 연내 **우선 시행**(10월)

- 필수의료 **급여항목** 확대(MRI, 고가 항암제 등) 및 **적용기준**, 재정계획 로드맵 등 **구체적인 보장성 계획 확정**(6월)

* 신속한 추진을 위해 복지부내 **의료보장 추진본부 설치**(3월)

○ 4대 중증질환 이외의 고부담 중증질환은 의료적 필요성, 재정상황 등 우선순위를 고려하여 **단계적 급여화** 추진

## 2 3대 비급여 환자부담 완화방안 마련

○ 환자 부담이 큰 **3대 비급여**(상급병실, 선택진료비, 간병비)에 대해 **실태조사** 및 환자부담 완화를 위한 **종합대책 마련 추진**

**<제도개선 방향>**

① 소비자의 실질적 선택권한 강화
- '선택 아닌 선택'이 강제되지 않도록 상급병실, 선택진료 기준 등 제도 개선

② 수도권 상급병원의 환자쏠림 방지 및 의료편중 해소

③ 의료의 질적 수준이 유지될 수 있는 건강보험 보상체계 개선

○ **3대 비급여 해결**을 위해 민관 합동으로 **「국민행복의료기획단」을 구성**(3월), **연내 실천적 제도개선방안을 마련**하고 국민 공감대를 형성

## 3 본인부담 제도개선 등을 통한 부담 경감

○ **상한제를 세분화**(3단계→7단계)하되 저소득층 상한액은 낮추고(200만원→120만원) 고소득층 상한액을 높여 부담의 **형평성 제고**('13.6월 확정, '14.1월 시행)

* 7단계(안) : 120만원, 150만원, 200만원, 250만원, 300만원, 400만원, 500만원

○ 건강한 식생활을 위하여 **노인틀니 급여를 부분틀니까지 확대**하고(7월), **노인 임플란트 보장성 계획 수립**(6월, 건강보험정책심의위 보고)

* '14년 75세 이상, '15년 70세, '16년 65세까지 건강보험을 적용하여 개인 치아상황에 맞는 맞춤형 치료 가능

## 2 예방적 건강관리체계 구축

### 1 담배·술 등 건강위협요인에 대한 종합적 관리

○ **경고그림** 부착, **오도문구 사용 금지, 담배연기 성분 및 첨가물 공개** 등 금연정책 강화(건강증진법 개정 추진)

○ **공중이용시설**(학교·의료기관 등)에서의 **주류판매 및 음주금지, 대중교통시설·학교 주변** 등의 **주류 광고 제한**(건강증진법 개정 추진)

### 2 예방적 보건의료 인프라 강화

○ 영유아·일반·생애·암검진 등 **각종 검진사업을 「생애주기별 맞춤 건강검진」사업으로 통합**, 모든 연령에 대해 주기적인 검진을 제공

- 검진주기 단순화, 연령별 목표 질환에 대한 검진항목 선정, 보건소를 통한 사후관리 내실화 추진(개편안 5~6월 발표)

○ **보건소 기능**을 질병예방 및 지역사회 **건강증진 중심으로 개편**하고(지역보건법 개정 추진), 지자체 건강증진 **포괄보조금 확대 추진**

### 3 4대 중독문제(알코올, 마약, 도박, 인터넷)에 대한 종합적 대응

○ 알코올, 인터넷 중독 등 예방을 위한 **중독 종합대책*을 마련**(5월)하고, (가칭) **「중독 예방·관리 및 치료에 관한 법률」 제정 추진**(7월 국회제출)

* 마약·사행산업 등 중독 물질에 대한 접근성 제한, 중독 폐해에 관한 대국민 인식 개선, 중독자 조기발견 ·치료체계 구축

○ **범부처 중독대책 논의기구**((가칭)「4대중독대책위원회」)**를 설치**하여, 종합적인 중독예방·관리체계 구축

## 3 수요자 중심 보건의료체계 개편

### 1 국민중심의 효율적 의료공급체계 구축

○ **(대형병원) 연구중심병원 지정**(3월), **재정적·행정적 인센티브 지원** 등을 통해 중증질환 진료 및 신 의료기술 개발 등 촉진

○ **(중소병원) 전문병원 임상 질 지표 개발, 거점병원 취약지 표준 모델 개발** 등을 통해 중소병원의 자생력을 강화

○ **(동네의원) 만성질환 관리 역할을 강화**하고, 중소병원·대형병원 등과의 기능재정립을 위한 건강보험 수가·지불체계 조정 추진

### 2 응급의료체계 강화로 국민 생명 보호

○ **응급의료전용헬기를 추가 확충·운용**(2대, 7월~)*하고, 관계부처 협의를 통해 **범부처 헬기 공동운용체계 구축방안 마련**(12월)

* '13년 강원, 경북 운용시작(총 4대, '11년부터 인천, 전남 운용 중)

○ **응급의료기관을 기능에 따라 개편**(3단계→2단계, 법률 개정)*하고 농어촌의 응급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한 지원을 확대

* 지역응급의료기관(1차응급진료, 접근성) - 응급의료센터(최종치료, 전문성)

○ 전국 어디서나 1시간내 **중증외상 진료가능한 외상센터를 설치**

* '13년 4개소 신규 선정, 시설·장비비 및 운영비 지원

### 3 균형잡힌 공공의료 제공체계 구축

○ **지역별 의료자원 분포, 의료이용 실태 등을 조사**(5월)하고, 농어촌을 중심으로 **의료취약지 지정 및 지원방안*** **마련**(10월)

* 의료취약지 거점의료기관 지정, 시설·장비 보강, 공보의 지원 등

○ **지방의료원**의 **공익적 기능을 강화**하여 지역 내 거점병원으로 육성하고, 평가·모니터링 강화, 재정지원 효율화를 통한 **지속가능성 확보**

○ 호흡기, 류마티스·퇴행성 관절염 등 전문진료분야의 지역별 편차 해소를 위해 **공공전문진료센터 육성**('13년 4개소 개원, '14년 6개소 완공 목표)

## 4 보건의료의 지속가능성과 형평성 제고

### 1 건강보험 수가 및 지불제도 개선

○ 종합병원 이상 의료기관에 7개 질병군 **포괄수가제 확대 시행**(7월~)

○ 약품비 지출 적정화를 위해 **재정영향이 큰 약제에 대한 사후약가 관리를 강화**하고, **리베이트 약가인하 기준**도 **합리화**('13.下)

○ 취약지, 필수의료분야 등에 대한 효과적 지원이 가능하도록 **수가 및 가산체계 개편방안 마련 추진**

* 의료계, 학회, 관련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가칭)「수가조정위원회」 구성・운영(11월~)

### 2 보건의료 자원의 적정수급 및 질 향상 추진

○ **간호인력** 적정배치 및 질관리를 위한 **구체적 개편방안을 마련**, 의료법 등 관련 법령 개정 추진('13.下~)

○ 농어촌 등 **의료취약지 및 공공의료기관에 종사**할 **공공의료인력 양성방안을 수립**('13.下)

○ 의사 수련과정 효율화를 위한 **인턴제 폐지를 추진**(4월 입법예고) 하고, **전문과목별 수련과정 개편방안 연구** 실시(~12월)

### 3 건강보험료 부과체계의 형평성 제고

○ **연금소득 4천만원 초과자**는 직장가입자 **피부양자에서 제외**(5월~)

○ **실직・은퇴로 직장→지역가입자로 전환**되는 경우, 보험료 부담 경감을 위해 **임의계속가입 적용기간을 연장**(1년→2년, 5월~)

# Ⅲ. 보건복지행정 3.0
## (부처간 칸막이 제거 및 일하는 방식 개선)

1. 사회보장위원회를 통한 복지정책 통합 조정 강화
2. 국민 중심의 종합적 의약품정책 추진
3. 인구 사회정책의 거버넌스 구축
4. 한국형 보육·유아교육 발전 로드맵 추진
5. 아동 중심의 방과후 돌봄서비스 지원체계 구축
6. 보건복지외교(Well-being Diplomacy) 활성화

# 1 사회보장위원회를 통한 복지정책 통합 조정 강화

## □ 검토 배경

○ 각종 사회보장제도가 **부처별로 기획·집행***되어 대상과 내용 등이 복잡·다양하고 **수요자의 혼란과 일선 공무원의 업무부담** 초래

* 중앙 : 16개 부처 292개 사업 시행(사회보장정보시스템 구축 기준)
지방 : 1만 9천여개 자체사업 시행(직접수혜성 5천 3백여개)

○ 사업내용(돌봄, 대부, 집수리 등)이 유사하거나 대상이 중복(각종 교육비, 의료비 지원 등)되는 등 **비효율성 문제 제기**

- 신설·변경 제도뿐만 아니라 **기존 제도에 대한 연계·조정 필요**

## □ 향후 추진계획

○ **사회보장위원회**를 **중심으로 유사·중복사업 단계적 조정 추진**

- 전부처 **사회보장제도 세부내용을 분석·검토, 사회보장기본계획, 기초생활보장제도 개편 및 기준 표준화 등과 연계**하여 조정방안 마련

* 심층평가('13.4~8월)를 통해 분야별 중복여부 검토 및 세부 조정방안 마련

- 분야별로 **민관합동 작업반**을 구성, **파급효과, 시급성** 등을 고려하여 **단계적으로 조정·연계 추진**('13.下)

○ 각 부처 및 지자체의 **신설·변경 복지사업**에 대해 **복지부장관이 타당성을 사전 검토**하고 **위원회를 통해 조정**

* 사전협의 대상 세부기준 등은 '사전협의 운영지침'을 통해 구체화(3월)

○ **사회보장 중장기 재정추계, 통계기반 확충** 등을 통해 사회적 여건, 재정소요 등을 감안한 근거중심행정 추진

○ **생애주기별 맞춤형 복지** 구현을 목표로 범정부적 차원의 **제4차 사회보장기본계획('14~'18) 수립**(11월)

- 다양한 분야 현장전문가 등으로 '민관합동 추진단'을 구성, **중장기 복지 비전** 및 재원을 포함한 **구체적 정책방안** 제시

## 2 국민 중심의 종합적 의약품정책 추진

### □ 검토 배경

○ **식품·의약품 안전관리체계를 강화**하기 위하여 새 정부는 기존 식품의약품안전청을 총리실 산하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로 개편**

- 의약품·의료기기 등과 관련, 복지부는 약사인력·의약분업 등 보건의료 정책과 관련된 사항을, 식약처는 안전관리 관련 사항을 각각 분담

* (복지부) 약사 등 인력관리, 의약분업 정책, 안전상비의약품 약국외 판매, 의약품 판매, 약품·의료기기 리베이트 제재 등 담당
(식약처) 의약품 품목 허가, 의약외품 지정 등 의약품 제조 관련 업무, 위해의약품 회수·폐기, 의료기기 제조·수입 관련 업무 등 담당

○ **의약품·의료기기 정책**과 **안전관리**가 국민건강·보건의료의 **큰 틀에서 정합성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부처간 상시 협조체계 구축 필요

### □ 향후 추진계획

○ 의약품의 제조-유통-사용 등 전 단계의 **일관성 있는 정책 추진**을 위해 위원회 등 **공식적인 협의기구** 발족·운영

- 의약품 오남용 방지, 전문/일반의약품 분류, 약사감시 및 처분 등 **공동소관법령**(약사법·의료기기법 등) **개정사항** 심의·조정 등

○ 복지부와 식약처 간 **실무협의체**를 통해 **탄탄한 협조체계**를 마련함으로써 상호 이해 증진 및 원활한 업무 추진 도모

- (협의사항) 의약품·보건의료 정책 간 연계를 위한 **발전적 과제 발굴**, 업무추진방식 효율화 등 논의

- (운영방식) **격월 국·과장급** 정기회의(필요시 수시회의 개최), 반기별 실장급 협의 추진

## 3 인구 사회정책의 거버넌스 구축

### □ 검토 배경

○ 향후 **저출산·고령사회 대응**을 위해서는 재정투자 외에도 교육, 고용 등 **범부처적 제도 개혁**을 통한 **근본적 문제해결이 필요**하나,

- 특정 대상 혹은 분야로 **재정투자가 편중**되고, 주거 등 **일부정책**은 **저출산·고령사회 대응에 역행하는 현상** 발생

  * 최근 1-2인 가구중심으로 주택 공급 정책 변화 등
  * 보육, 기초노령연금 등 일부사업에 전체 재원의 70%가 집중

○ **거시적 관점에서 정책을 조정**하고 **균형적 재정투자를 담보**할 **관리 인프라와 정책 조정체계를 확립**할 필요

### □ 향후 추진계획

○ **저출산 문제 해소**를 **국정 최우선 과제**로 삼아 범부처간 인구문제 대응을 추진할 수 있는 **거버넌스 확립 추진**

- 인구정책 컨트롤타워로서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를 활용, **'지속가능한 국가발전을 위한 세부실천과제*'** 마련 ('13년)

  * '13년 하반기 개최예정인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본회의 안건 상정예정

- 분야별 실천과제 수립 후 **위원회를 통해 쟁점과제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달성**하고, 이를 바탕으로 **장기 인구전략 수립** ('14년~)

**< 인구문제 대응 관련 주요 개혁과제(안) >**

◆ **(임신·출산 지원)** 고위험 임산부 지원, 난임부부 시술비용 경감, 산모신생아도우미사업 확대 등

◆ **(양육친화적 환경)** 육아휴직 기업 인센티브 강화, 부성휴가제 의무화 등

◆ **(소득)** 차상위 지역가입자 연금 보험료 지원, 퇴직일시금을 퇴직연금으로 일원화 유도 등

◆ **(고용)** 정년의무화 등 정년제 개선, 청년 및 여성 경제활동참여율 확대방안 마련 등

◆ **(교육)** 학제 및 교육과정개편 등 청년층 조기사회진출 촉진 방안마련

## 4 한국형 보육·유아교육 발전 로드맵 수립

### □ 검토 배경

○ (현황) 정부는 **보육·유아교육에 대한 국가책임을 강화**하고자 **누리과정 도입·확대** ('12년 5세 → '13년 3~4세로 확대)

- 누리과정은 어린이집·유치원 **공통 보육·교육과정을 통합**(3~5시간)한 것으로 **보육·유아교육계간, 부처간 모범적 협력 사례로 평가**

* 누리과정(3~5시간) 이후에는 별도 돌봄(보육), 방과후 과정(교육) 운영

○ (협의 사항) 최근 **공통 누리과정에서 더 나아가 보육·유아교육 통합의 필요성** 제기

- 다만, **양 기관의 부모 부담, 운영시간, 교사양성 및 처우, 정부지원 등 격차를 해소**할 수 있는 사전 준비 철저 필요

**< 어린이집과 유치원 비교 >**

| 구 분 | 어린이집 | 유치원 |
|---|---|---|
| 부모 부담액* (1인당, '12년) | 115천원/월 | 417천원/월 |
| 비용 및 특별활동 수준 | 시도별수납한도액內결정 | 원장 자율 결정 |
| 운영 일수 및 시간 | 공휴일 제외 연중 무휴<br>12시간 종일제<br>(07:30~19:30, 의무) | 수업 일수 180일 기준<br>3-5시간(기본)+방과후(선택) |
| 교사 급여 | 114만원/월 | 166만원/월 |
| 교사처우개선비 | 30만원/월(3~5세)<br>12만원/월(0~2세) | 51만원/월 |
| 정부지원액* (3-5세 1인당, '12) | 199천원/월 | 437천원/월 |

* 출산 및 육아지원사업군 심층평가 결과 및 지출 성과 제고방안('12.11, 기재부)

### □ 향후 추진계획

○ 우선, "0~5세 보육·유아교육 국가책임제 실현"을 위해서 **시작 단계인 3~5세 누리과정 내실화·안정적 정착 추진**

○ **보육·유아교육 발전 로드맵 마련**을 위한 **민관합동TF** 구성·운영('13.上~)

* 관계부처(복지부·교육부 등), 육아정책연구소, 학계·전문가, 학부모, 어린이집·유치원 운영자 등으로 구성

** 수요자(아동·부모), 공급자, 재정·전달 체계 등 다방면에서 신중한 준비와 소통 추진

- **누리과정 운영평가, 시범사업 추진** 등을 거쳐 **면밀히 준비 후 신속 추진**

## 5 아동 방과후 돌봄서비스 관계부처 연계체계 구축

### □ 검토 배경

○ **방과후 돌봄서비스**를 **복지부, 교과부, 여가부에서 각각 추진**하고 있어 부처 간 또는 사업 간 **연계·조정 문제 제기**

- 복지·교과·여가·행안부가 함께 **업무협약을 체결**('12.10월~), 부처간 협의 조정체계 구축 등 **부처 간 칸막이를 제거하고자 노력**

**< 각부처 방과후 돌봄사업 현황 >**

('12.12월 기준)

| 구분 | 복지부<br>지역아동센터 | 교과부<br>초등돌봄교실 | 여가부<br>방과후아카데미 |
|---|---|---|---|
| 대상 | 만 18세 미만 | 초등학교 저학년<br>(고학년 일부) | 초등4학년~중등2학년 |
| 서비스 내용 | 보호, 학습지도, 급식지원, 상담, 지역사회 연계 등 | 보호, 학습지도 및 일부 급식지원 | 특기적성 교육 등 역량개발, 급식지원 |
| 규모 | 4,036개소 | 7,400교실 | 200개소 |
| 이용 아동 | 107천명 | 160천명 | 8천명 |

### □ 향후 추진계획

○ 관계부처 합동으로 돌봄서비스 **효율적 연계** 및 **통합지원 방안** 마련

- 정책 논의를 위한 **관계부처 정책협의회 운영**(연중 상시)

- 부처별 돌봄사업 간 **연계모델 개발 공동연구**(~4월)

- 연계방안의 현실적합성 검토를 위한 **공동시범사업**(~6월, 6개 시군구)

  · 지역 교육청 주관으로 시군구·교육청 협의체 구성, 부처별 거점기관 지정·활용으로 사각지대 발굴 및 적합한 기관에 연계

* 시범사업 지역 : 서울 노원구, 부산 서구, 경기 성남시, 전남 나주시, 울산 울주군, 전북 진안

## 6 보건복지외교(Well-being Diplomacy) 활성화

### □ 검토 배경

○ **보건복지 서비스 확대 및 질 향상**에 대한 요구가 **각 국 정부의 공통 관심사**가 되면서 글로벌 이슈화로 대두

- 특히 **보건의료산업**의 경우 **거대한 국제시장이 형성**되면서 **신(新) 성장동력의 기회로 대두**

  * (세계의약품시장) 858억불('09년)→896억불('10)→942억불('11) (IMS Health 2012)

○ 향후 **보건복지외교**(Well-being Diplomacy)를 **우리 외교의 핵심 테마로 도입**, 세계를 선도하는 **보건의료·복지 강국으로 거듭날 필요**

### □ 향후 추진계획

○ 관계 부처 간 **보건복지외교에 대한 비전을 공유**하고, **부처별 역할 분담** 및 **범정부적 상호 협조 프레임 구축**

- **(복지부)** 보건복지외교 **콘텐츠 발굴·제공, 국내 관련 기관 및 중점 추진 대상국 점검·관리**

- **(외교부/산업통상자원부)** 해외공관 및 코트라 무역관을 통한 **네트워킹 서비스 제공**, 주재국 정부 및 업계와 **보건복지외교 홍보 및 협력 가능 분야 발굴**

○ **주요 협력 관심국가**와 정기적 **보건의료정책협의회 개최** 및 **MOU 체결** 등 실질적 협력 수단 모색

**<보건복지외교 주요 콘텐츠(안)>**

○ **(해외진출 활성화)** 보건의료 산업 육성, 우리의 선진 제도 및 인프라 해외진출 등

  * (건강보험) IT를 이용한 심사·평가 시스템, 의약품종합유통관리시스템, (보건산업) 제약·의료기기·화장품 수출, 의료기관 진출, 해외 환자 유치

○ **(국내유치 확대)** 우리 기업과 해외 기업 간 전략적 제휴

○ **(보건의료원조(ODA))** 병원 건립 등 하드웨어 및 거버넌스 구축, 교육훈련, 제도·운영 자문 등 소프트웨어 병행 지원

< 별첨 >

# 국정과제 세부 추진일정

# 별첨 국정과제 세부 추진일정

| 번호 | 과제명 | 2013년 | | | | | | | | | | 2014년 | | 2015년 이후 |
|---|---|---|---|---|---|---|---|---|---|---|---|---|---|---|
| | | 3월 | 4월 | 5월 | 6월 | 7월 | 8월 | 9월 | 10월 | 11월 | 12월 | 상반기 | 하반기 | |
| **아 동** | | **걱정없이 아이를 낳고 키우는 사회환경 조성** | | | | | | | | | | | | |
| 1 | **국가가 책임지는 보육지원 강화** | · 보육료 및 양육수당 0~5세 全 계층 지원<br>· '13년 국공립 신축 추가 지역선정 및 확충 추진<br>· 입소 실태조사 및 현장지도<br>· 부모 모니터링단 운영 개시 | · 시간차등형 보육서비스(일시보육) 시범사업 제공 시설 지정<br>· 육아종합지원센터 설치지역 선정<br>· 공공형 어린이집 확충계획 수립 | · 저소득 취약계층에 대한 특별활동비 등 지원방안 검토<br>· 표준보육비용 계측 연구용역 수행기관 공모<br>· 시간차등형 보육서비스(일시보육) 시범사업 실시<br>· 공공형 어린이집 확충 추진(연중) | · 육아종합지원센터 신축 (~'14.下) | | | · 시간차등형 보육서비스(일시보육) 시범사업 중간보고<br>· '14년도 국공립확충 사업 대상선정을 위한 현지 실사(9~10월) | · '14년 육아종합지원센터 설치 수요 조사 | | · 시간차등형 보육서비스(일시보육) 시범사업 최종보고 및 평가<br>· 육아종합지원센터 '14년도 설치 예정 대상지역 선정 | · 육아종합지원센터 신축 및 기설치 센터 서비스 제공<br>· '15년 국공립확충 사업 대상 지자체 신청 접수<br>· '14년 공공형 어린이집 확충계획 수립 및 확충 추진<br>· 영유아보육법령 개정 | · '15년 국공립확충 사업 대상선정을 위한 현지실사 및 선정<br>· 공공형 어린이집 운영 및 관리 | · 미설치지역을 중심으로 육아종합지원센터 연차별 신축<br>· 국공립확충 사업 계속 추진<br>· 공공형 어린이집 지속 확충 |
| 2 | **임신·출산 지원 및 취약아동 보호체계 개편** | · '13년 분만취약지 지원 사업 대상기관 선정 (신규 4개소)<br>· 방과후 돌봄서비스 관계부처 합동 수요조사 | · 학대피해아동 가족지원 치유프로그램 운영 개시 | · 국외입양인 실태조사<br>· 헤이그국제 아동입양협약 이행입법안 의견수렴<br>· 아동학대 예방교육 실시 | · 입양인 사후관리 서비스 정보시스템 개편<br>· 방과후 돌봄서비스 시범사업 성과평가 | | ·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지원 방안 마련 | · 고위험산모 경비 추가지원 우선순위 설정 | | | · 고위험산모 경비 추가지원 실시(3월~)<br>· 방과후 돌봄 부처통합 지원체계 구축·운영 | ·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지원 사업 시행<br>· 고위험산모 경비 추가지원 실시(3월~)<br>· 방과후 돌봄 부처통합 지원체계 구축·운영 | | |
| **청장년** | | **일자리 창출을 통한 창조경제 선도** | | | | | | | | | | | | |
| 1 | **고부가가치 사회서비스 활성화** | | | | · 사회서비스 산업 진흥계획 수립 | | | | | · 범부처 사회서비스 일자리 창출계획 발표 | · 사회서비스 산업 특수분류 신설<br>· 바우처 통합관리 시스템 BPR/ISP 수립<br>· (가칭)'사회서비스 품질관리법' 제정 | | | · 사회서비스 품질 전담기구 설립 |

| 번호 | 과제명 | 2013년 | | | | | | | | | | 2014년 | | 2015년 이후 |
|---|---|---|---|---|---|---|---|---|---|---|---|---|---|---|
| | | 3월 | 4월 | 5월 | 6월 | 7월 | 8월 | 9월 | 10월 | 11월 | 12월 | 상반기 | 하반기 | |
| 2 | 복지 일자리 확충 및 처우개선 | · 사회복지생활시설 3교대 근무 관련 추진범위 협의 | · 지자체별 인건비 가이드라인 준수 현황 조사 | ·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보수 및 근로실태조사 계획 확정<br>· 공익근무요원의 사회복무분야 배정 확대를 위한 관계부처(병무청) 협의<br>· 사회복무요원 직무 심화교육 세부시행계획 수립·확정 | · 지자체별 인건비 가이드라인 준수율 공표 | ·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보수 및 근로실태조사 착수 | | · 사회복지시설 장기 근속자 포상 | | | · 사회복지생활시설 3교대 추진방안 및 유형별 처우개선 방안 마련<br>· 사회복지공무원 확충방안 마련 | · 사회복지시설 유형별 처우개선 추진<br>· 사회복무요원 직무 심화교육 확대 실시 | · 사회복지직 공무원, 서비스 전문인력 확충 추진 | · 인력확충, 처우개선 등 추진 계속<br>· 사회복무요원 사회복지분야 배정 확대 계속 |
| 3 | 창조경제 성장동력으로서 보건산업 육성 강화 | · 병원 해외진출 전문 민·관 합작회사 설립<br>· 제약분야 전문인력 양성 대학원 운영 개시<br>· 연구중심병원 지정 | · 제약산업 육성 지원 5개년 종합계획 수립<br>· 범부처 국민건강 R&D 중장기 추진계획 수립<br>· 고령친화 우수제품 지원방안 마련 | · 글로벌 제약산업 육성 펀드 조성<br>· 의료기기 산업 중장기 발전계획 수립<br>· 한의약 세계화 중장기계획 수립<br>· 한방 병의원 해외환자 유치 컨설팅 실시 | · 화장품 산업 중장기 발전계획 수립<br>· 장기요양 복지용구 제품 급여 확대 | | · 노화 관련 R&D 핵심과제 발굴 | · 산청 세계전통의약 엑스포 개최 (~10월) | | | · 해외환자 유치채널 다양화를 위한 의료법 개정 | · 보건산업 R&D 투자 지속 확대 | | |
| 노 인 | | 행복한 노후를 위한 국가적 지원체계 구축 | | | | | | | | | | | | |
| 1 | 든든한 노후 소득보장체계 구축 | · 국민행복연금 위원회 구성 및 1차 회의<br>· 제3차 연금 재정계산 재정추계 결과 발표 | · 언론 간담회<br>· 국민행복연금 위원회 회의<br>· 저임금 근로자 연금보험료 지원사업 지원율 상향 적용 | · 국민행복연금 위원회 잠정안 마련<br>· 전문가 의견 수렴<br>· 당·정 협의 | · 국민행복연금 관련 공청회(간담회) | · 국민행복연금 관련 의견 수렴 후 위원회 검토 | · 법률 정비안 마련 | · 법안 심의 및 예산 협의 | · 국민연금 중장기 제도개선방안 수립 | · 하위법령안 마련 | · (가칭)'국민행복연금법' 국회 통과 | · 하위법령안 제(개)정 완료<br>· 인력 및 조직 인프라 확충<br>· 전산시스템 구축<br>· 신청 접수 및 대상자 선정·통보 | · 국민행복연금 지급 시행(7월)<br>· 제도 시행 모니터링 | · 국민행복연금 지속 시행 |

| 번호 | 과제명 | 2013년 | | | | | | | | | | 2014년 | | 2015년 이후 |
|---|---|---|---|---|---|---|---|---|---|---|---|---|---|---|
| | | 3월 | 4월 | 5월 | 6월 | 7월 | 8월 | 9월 | 10월 | 11월 | 12월 | 상반기 | 하반기 | |
| 2 | 건강하고 활기찬 노후생활 지원 | · 지역사회 치매환자를 위한 치매병원 모델 연구 실시<br>· 치매통합상담콜 구축 방안 연구 실시<br>· 돌봄종합서비스 대상자 선정시 독거노인 우선 선정기준 마련<br>· 독거노인 단기가사 서비스 시범 실시 | · 장기요양 등급체계 개편 및 치매관리모형 개발에 관한 연구 추진<br>· 돌봄종합서비스 대상자 중 독거노인 현황 파악<br>· 생애설계교육 사업 시행 | · 돌봄종합 서비스의 독거노인 관리프로그램 개발<br>· 독거노인의 사회적 지원방향 연구 | · 국가 건강검진의 치매검진 개선안 마련 | · 치매병원 제도화 방안 마련<br>· 장기요양 등급 판정도구 개편 및 인정점수 완화<br>· 노인일자리 확충 종합계획 수립 및 老老케어 일자리 확충 방안 마련 | | · 치매 전문인력 표준 교육과정 마련<br>· 독거노인 돌봄사업 현장의견 수렴 | · 의료·요양 연계체계 구축방안 마련 | · 노인일자리 사업 참여자를 활용한 치매환자 돌봄사업 추진방안 마련 | · 콜센터 상담 매뉴얼 및 상담자 교육 커리큘럼 개발 완료<br>· 독거노인 돌봄확대를 위한 돌봄종합서비스 사업지침 개정 | · 치매등급 신설을 위한 시행령 개정 추진<br>· 치매상담콜센터 설치 및 개통<br>· 독거노인 돌봄서비스 지원확대 | · 등급체계 개편 및 치매등급 시행<br>· 인지재활 프로그램 서비스 모델 개발, 효과성 검증 | · 인지재활 프로그램 통합지원서비스 보급<br>· 독거노인 돌봄서비스 지원확대 |
| 취약계층 | | 대상자별 맞춤형 복지를 통한 사각지대 완화 | | | | | | | | | | | | |
| 1 | 맞춤형 개별급여체계 도입 및 사각지대 해소 | · 개별급여 도입 관계부처 협의체 TF 구성<br>· 개별급여 개편방안 연구용역 추진(~12월) 및 전문가 자문단 구성<br>· 차상위계층 기준확대 연구용역 추진(~6월) | · 개별급여 개편방향 확정(사회보장위원회 상정·논의)<br>· 나눔교육센터 설립 | · 지역사회복지 협의체 운영 활성화방안 마련 | · 개별급여 개편방안 연구용역 중간보고 | | | · 개별급여 개편방안에 대한 중앙생활보장위원회 전문위원회 논의 | · 급여종류별 세부 수급기준선 마련(중앙생활보장위원회 논의·검토) | |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개정안 국회통과 | · 관계부처 추진단 확대 운영<br>· 시행 세부지침 마련<br>· 사통망 개편<br>· 지자체 교육 및 제도 홍보 | · 맞춤형개별급여 개편 | |
| 2 | 근로유인 강화를 통한 '일하는 복지' 도모 | | · '근로유인형 급여체계 구축 방안' 사회보장 위원회 심의 | | | | | | · (가칭)'내일 행복지원단' 시범운영 | | | · 차상위층 대상 희망키움통장 신규 도입 | | |
| 3 | 전달체계 개편을 통한 복지체감도 제고 | · 주민센터 복지허브화 관계부처 합동 TF 구성, 운영<br>· 주민센터 기능개편 방안 연구(6월) | · 사회보장정보 시스템 확대 구축 계획 수립 | | · 주민센터 복지허브화 세부 개편방안 마련 | · 주민센터 복지허브화 세부 개편방안 확정(사회보장위원회 보고) | · 주민센터 복지허브화 관계부처 합동추진단 운영<br>· 주민센터 기능 개편 준비<br>· '13년 사회보장정보 시스템 1단계 개통(통합DB 등)<br>· 사통망 개편 준비 | | | | · (가칭)'사회보장급여 이용 및 제공에 관한 법률' 제정<br>· '13년 사회보장정보 시스템 2단계 개통(서비스의뢰 시스템 등) | | · 사회복지직 공무원, 서비스 전문인력 확충 추진<br>· 주민센터 기능 개편 추진<br>· 사통망 개편 | |

| 번호 | 과제명 | 2013년 | | | | | | | | | | 2014년 | | 2015년 이후 |
|---|---|---|---|---|---|---|---|---|---|---|---|---|---|---|
| | | 3월 | 4월 | 5월 | 6월 | 7월 | 8월 | 9월 | 10월 | 11월 | 12월 | 상반기 | 하반기 | |
| 4 | 장애인의 행복한 삶 지원 | · 중증장애인 보호를 위한 정책연구 추진계획 수립<br>· 중증장애인 응급안전시스템 구축 시범사업 계획 수립<br>· 장애인 재활, 건강증진 프로그램 시행<br>· 공공재활 프로그램 시행 | · 발달장애인법 관련단체 의견수렴 및 국회협의<br>· 장애인 소득보장제도 급여체계 개편 연구 실시<br>· 중증장애인 보호를 위한 정책연구 착수(4~11월)<br>· 중증장애인 응급안전 시스템 구축 사업자 선정 | · 중증장애인 보호 정책연구 및 응급안전 시스템 구축 지속 | | · 발달장애인 관련 서비스 지속 확대 (7월~) | · 장애인연금 기초연금화 관련 법률 정비안 마련<br>· 장애인연금 부가급여관련 법률(안) 마련 | · 장애인연금 부가급여 관련 법률(안) 국회 제출 | · 중증장애인 응급안전시스템 시범운영 | · 중증장애인 보호를 위한 정책 연구 종료 및 공청회 개최 | · 발달장애인법 제정<br>· 장애인연금 부가급여 관련 법률(안) 국회 통과<br>· 중증장애인 보호 종합대책 수립 | · 장애인연금 하위법령안 제정<br>·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 추진<br>- 중증장애인에 대한 통합적 서비스 제공체계 마련<br>· 중증장애인 응급안전시스템 시범사업 평가 | · 장애인의 기초연금 시행 | · 장애인연금 부가급여 현실화<br>· 활동지원급여 신청자격 확대 (1·2급→1~3급 장애인) |
| 보건의료 | 건강한 삶을 보장하는 보건의료체계 개혁 | | | | | | | | | | | | | |
| 1 | 의료보장성 강화로 국민부담 경감 | · 4대 중증질환 보장성 확대 추진 T/F 구성<br>· 4대 중증질환 비급여 항목 자료수집<br>· 3대 비급여 해결을 위한 '국민행복의료 기획단' 구성 | · 주요 상급종합병원 비급여 자료 수집 및 분석<br>· 4대 중증질환 필수의료 서비스 소요 재정액 파악 | · 4대 중증 비급여항목 급여화 우선순위 결정(학회 및 심평원, 공단 등 전문가 참여) | · 4대중증질환 보장성 추진계획 수립<br>· 본인부담 상한제 개선방안 확정<br>· 노인 임플란트 보장성 계획 수립 | · 만 75세이상 부분틀니 건강보험 적용 시행 | | | · 4대 중증질환 초음파 검사 건강보험 급여 적용 | | | · '15년도 4대중증 급여화 세부추진계획 수립(중기계획과 연동하여 추진)<br>· 본인부담 상한제 개선 시행 | · 75세이상 임플란트 급여적용 시행 | · '16년도 4대중증 급여화 세부추진계획 수립(중기계획과 연동하여 추진)<br>· 노인틀니 및 임플란트 연령하향 ('15년 70세, '16년 65세) |
| 2 | 예방적 건강관리체계 구축 | | | · 건강검진 개편안 발표 (5~6월 중)<br>· 중독 종합대책 마련 | | · (가칭)'중독 예방·관리 및 치료에 관한 법률' 국회 제출 | | | | | · 건강증진법 개정 | | | |
| 3 | 수요자 중심 보건의료체계 개편 | · 연구중심병원 지정 | | · 지역별 의료자원 분포 및 의료이용 실태 조사 | | · 응급의료전용 헬기 추가 확충·운용 개시 | | | · 의료취약지 지정 및 지원방안 마련 | | · 범부처 헬기 공동운영체계 구축방안 마련<br>· 응급의료기관 기능개편 관련 응급의료법 개정 | | | |
| 4 | 보건의료의 지속가능성과 형평성 제고 | | · 의사 인턴제 폐지 관련 입법예고 | · 연금소득 4천만원 초과자는 건보 피부양자에서 제외<br>· 건강보험 임의계속가입 적용기간 연장 | | · 7개 질병군 포괄수가제 종합병원 이상 확대 시행 | | | | | | | | |